
중기사업계획('22~'26)

2022. 1.

법 제 처

목 차

I.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1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1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2
II. 향후 재정투자계획	12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12
2. 정책방향	17
3. 재정운용방향	18
4. 성과목표(지표)	28
III. 재정혁신 추진계획	28
IV. 중기 지출계획	29
1. 지출계획 총괄표	29
2. 지출변동 내역	30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33
4. 국정과제 추진계획	33
V. 프로그램별 설명서	34

I. 그동안의 재정운용분석

1. 최근 5년간 재정운용 추이 및 특징

- 법제처는 세입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약 0.01% 수준임.
- 분야, 부문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으로 구성
- 전체 예산의 약 64%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약 36%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처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6.8%로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8.8%보다 낮은 편임.

※ 재정규모 증가 요인

- 법제처는 법령심사지원,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법제업무정보화추진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행정기본법제 개선 등 중점 추진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재정규모가 증가해왔음.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비 투자규모 추이(백만원)
 - 법령정보제공 사업 : ('18) 1,308 → ('22) 2,177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18) 508 → ('22) 855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18) 782 → ('22) 1,049
 - 법령심사지원 사업 : ('18) 109 → ('22) 421
 - 법제정비 사업 : ('18) 1,534 → ('22) 1,521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18) 1,118 → ('22) 1,221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18) 146 → ('22) 277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 ('18) 6,009 → ('22) 8,801
 - 행정법제 혁신 : ('18) - → ('22) 470

< 법제처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7실적	'18실적	'19실적	'20실적	'21실적	연평균 증가율
계	317	333	347	384	373	4.2
○ 예 산	317	333	347	384	373	4.2
【일반지방행정분야 분야】	317	333	347	384	373	4.2
▪ 일반행정 부문	317	333	347	384	373	4.2

2.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① 법제정보서비스 단위사업

○ 법령정보제공사업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및 법제처의 주요 정책을 국민 체감형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제공
 - 알기 쉬운 입법예고: '21년도 온라인 7회, 지면 6회, 총 272건 입법예고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매월 12,000부씩 '21년도 총 144,000부 발행
 - 법제정책 알리기: 법제처 주요 사업 홍보영상 제작, 인포그래픽 제작, 이벤트 개최, TV·라디오광고 송출, 지면광고 게재 등 법제처 주요 사업·관련 콘텐츠 총 438건 게재
- 어린이·청소년의 법제 교육을 위하여 법제교육 및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준법정신 함양
 - '17~'21년도 어린이법제관 총 위촉 인원: 5,945명
 - '17~'21년도 어린이법제관 총 입법 체험 활동 인원: 7,943명
 - '17~'21년도 홈페이지 총 인터넷 게시물 등록 건수: 99,819건
 - '17~'21년도 청소년법제관 총 위촉인원: 1,379명
 - '17~'21년도 청소년법제관 총 입법 체험 활동 참여인원: 4,236명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
 - '21년 4개 분야(조세·부동산·노동·안전)의 12개 대표 법령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부처 감수를 거쳐 약 250개 콘텐츠를 시범 개발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12. 15.)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보서비스로서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운영, 세계 주요 국가·지역·기구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중소기업,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이용자가 원하는 해외 법령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실시
 - *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수 : ('19) 1,020건 → ('20) 1,069건 → ('21) 1,104건
- 중점관리대상 법령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개정·폐지 등 정보를 현행화 하고 이용자 수요 및 최근 이슈를 반영한 법령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제공 범위 지속 확대
 - * 중점관리대상 법령: ('19) 809개 → ('20) 885건 → ('21) 1,028건
- 법령 영문 번역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법령 영문 번역계획 수립·시행, 법령 번역 관계 기관 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번역 기준을 통한 번역 법령 감수 등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주한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법령 영문 번역에 대한 수요조사(연 2회, 총 84개 기관 대상)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법령 영문 번역 계획을 수립·시행(총 170건)하여 중복 번역 방지 및 번역 효율성 제고
- 관련 부처 담당자, 전문가가 참석하는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반기별 1회, 연2회)를 개최하여 법령 번역 관련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도모
- 중앙부처의 자체번역 법령에 대한 감수 실시(총 7건)를 통하여 번역 품질 제고 기반 마련
- 남북법제 연구를 통한 통일 대비 법제역량 강화
 - 연구용역 추진, 연구위원회 운영, 부처 간 정비협의회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통합 기반 마련
 - * (21년) 남북법제 통합 방안 연구(1건),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총3회), 남북 법제 정비협의회(총1회), 남북법제 공동세미나(총1회)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일상생활 분야별로 분류·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보편적 법령 접근성 보장 및 법인식 제고
- (활용성업) 어려운 법령제명·키워드를 몰라도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원자료(raw data)를 쉽게 해설·분류
 - * 서비스 개시 후 일일이용자수 5.2배 증가, ('12) 12,134명 ⇒ ('21) 63,198명

- (편의성업) 시대변화('모바일 온리 시대')에 대응하여 별도 개발예산 없이 시범 실시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속
 - * 2018 모바일브랜드 대상,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9, 2020, 2021 대상 수상
 - * 모바일앱 다운로드 건수(누적): ('18) 204천 → ('19) 220천 → ('20) 241천 → ('21) 257천
- (법인식업) 최신 판례·이슈를 웹툰으로 재구성하여 직접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솔로몬의 재판' 등 참여형 콘텐츠 확대
 - * 솔로몬의 재판 평결(월 2회) 평균 참여자수 2,300여명
- (비용↓) 생활 속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법률문제를 Q&A로 제공하여 실제 사례에 기반한 상황별 궁금증 해소, 법률자문 비용 절감 효과
 - * 네이버 지식IN과 생활법령 백문백답(2,500건)의 연계, 답변채택률 96.9%
- 주한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외국인 유학생 등)을 쉽게 해설하여 번역·제공하여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 기반 마련
- (소외·차별↓) 결혼이민자 등 주한 외국인이 법을 몰라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을 해설·번역(12개 언어)하여 제공, 안내교육 실시
- (사회통합업)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 활동 전문가 의견수렴(외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전문가 자문회의, '21.06.), 외국인 법제교육(10회) 등을 통해 국내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이해도 제고
- 최신 법령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Q&A로 재구성하여 법령·정책 홍보
- (정책홍보업) 출입국 검역, 긴급복지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계된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여 제공, 방역·복지 등 주요 정책 홍보

② 정부입법 총괄·관리 단위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21년 법률안 국회제출(147건) 지원, 법률 공포(853건) 등 정부의 원활한 법제업무수행을 지원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체계상 수직적(헌법, 법률 및 하위법령), 수평적(개별 법령 간) 통일을 확보하면서 정부 정책이 법령의 형식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 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 마련

- * '13년 ~ '19년간 추가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책자 II ~ V발간(약 170건 기준 검토), '18년 「법령심사 길잡이」, '21년 「법령 입안·심사 기준」(현재 전 부처 입안·심사 기준으로 활용) 전면 개정 등

- 입법내용의 전문화, 다수부처 관련 융·복합 법령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의 증대 등으로 각 부처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입안지원 제도 운영

- * '13년 ~ '21년간 총 1,894건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실시

- 법제업무역량 강화 사업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기준 및 법령정비 및 자치법규 사례 등을 보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개정증보판 발간('21.12.)
- 부처별 법제업무실적 점검(270개 정부입법계획 대상 법률, 2,153개 입법예고안, 473개 제때마련 대상 법령) 강화를 통한 법제역량 지원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불합리한 법령 정비 추진) 청년세대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등 청년 지원 관련 법령 및 불합리·불공정한 법령 등의 신속한 정비 지원
 - * '21년 법령정비과제 신규 발굴 : 536건 발굴
- (다양한 법령개선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운영,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령개선의견을 수렴
 - * '21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4~6월), 현장간담회 4회 개최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제도 운영) 정부부처 중심의 폐쇄적 심사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법제관, 국민참여 심사제 등 국민참여입법을 확대 운영
 - * 국민법제관 간담회 2회, 설문조사 2회, 온라인회의 5회, 온라인 워크숍 등 국민법제관 활동 활성화
 - ※ ('20년)국민법제관 활동률 81.8% -> ('21년)국민법제관 활동률 92.5%
 - * 법령안 심사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사제를 운영('20년 104회→'21년 105회)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상위법 위반 여부 및 조례 자체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하는 경우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제도 시행('11년 3월~)

- 의견제시 제도 시행 이후 '21년까지 총 3,190건 회신
 - * ('21년) 총 330건 회신, 평균 안건처리 기간 11.9일
- 매년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을 발간·배포,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법제 역량 강화 지원
- 법제전문성을 바탕으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입법기술적인 자치입법 사안과 비교적 간결하게 유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입법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담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제상담 119제도 시행('20년 1월~)
 - 자치법제상담 119제도 시행 이후 '21년까지 총 718건의 상담 제공
 - 자치법제상담 119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주 문의하는 자치입법 관련 질의와 답변내용을 책자(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로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21년 6월)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제고 및 지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 속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발굴·정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시행('14년 3월~)
 - (조례 자율정비) '14년부터 '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 9천여개(교육청 소관 17개 조례 포함) 전수 검토 완료
 - (규칙 자율정비) '18년, '19년 2개년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2만 4천여개에 대하여 전수 검토 완료
 - * 지방규제 혁신에 관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18년부터 3개년 사업에 대하여 조기 완료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중요 규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속 정비하여, 지방규제 개혁 속도 제고
- 발굴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는 규제개선 중요 사례 100선('14년) 및 50선('15년 ~ '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례집('18년 ~ '19년)으로 발간, 쏠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지방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 홍보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제도·자치법규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20년 11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작은도서관협회 관계자 대상)

-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 시행(‘20년 4월~’22년)
-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650개 조례 중 ‘21년 기준 375개 조례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분야별 대표적인 정비안들을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배포(‘21년)
- 자치법규 입안 업무 담당자들이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함(‘20년)
-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강화
 - * (‘21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자치법규 입안·해석을 상담·교육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총 35회 운영
-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방안, 자치법제 관련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지속 실시
 - * (‘21년) 권역별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3회(4.16., 9.10., 10.29.),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12.7.)
- ‘15년 3월부터 일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 전체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실시(‘21년까지 총 1,752건 회신)
- ‘20년부터 지자체 입법컨설팅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권자를 모든 기초지자체로, 컨설팅 대상은 일부개정까지 확대
 - * (‘21년)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등 총 474건에 대한 컨설팅 지원
- ‘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한 참고 자치법규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부적법한 자치법규의 소 지자체 확산을 방지(‘21년 1월 근거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4항)
 - * (‘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환경부) 등 총 22건 제공
 - * (‘20년) 「적극행정 운영 참고 조례안」(행정안전부) 등 총 53건 제공
 - * (‘21년) 「시·도 재해구호기금 참고 조례안」(행정안전부) 등 총 52건 제공

- '17년부터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지자체 등에 통보(공문)하여 법령 제·개정 현황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21년까지 총 812건 통보)

* ('21년) 「지방자치법」 제21조 등 총 272건 통보

- 지자체의 필수조례 입법현황을 점검·관리하고('21년 필수조례 입법 현황: 85.43%), 지자체 필수조례 제때 마련을 위해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의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관리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어려운 용어 사전 차단)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처협의안 검토 등 입법 단계별 사전 차단 실시

* ('19년) 어려운 용어 665개 발굴, 507건 법령 심사 완료(차단율 76.2%)

* ('20년) 어려운 용어 476개 발굴, 377개 법령 심사 완료(차단율 79.2%)

* ('21년) 어려운 용어 439개 발굴, 375개 법령 심사 완료(차단율 85.4%)

- (어려운 용어 사후 정비)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거쳐 집중적으로 정비

* (법령 2차 정비: '19년~'21년) 국토부 등 18개 부처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2,000여건 개정 협의 완료, 법률 663개 입법 추진, 법률 111개·대통령령 488개 개정 완료('22. 1. 기준)

* (행정규칙 정비: '20년~'21년) 교육부 등 9개 부처(1차)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1,992개에 대한 정비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2차)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3,555개 발굴('22. 1. 기준)

- (상시 알법 검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법령안 및 조례안을 검토하여 정비

* ('19년) 법령안 82건, 조례안 154건 정비

* ('20년) 법령안 153건, 조례안 91건 정비

* ('21년) 법령안 151건, 조례안 61건 정비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행정기본법」 제정 및 교육·홍보

- (법 제정)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 의결('21.2.26.) 및 제정 완료('21.3.23.)

- (교육) 법 시행에 따른 일선 공무원 및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 제작·배포('21.4., 2,500부) 및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21.5.~12.)

- * 총 45개 기관(중앙 13개, 지자체 32개), 총 27회 약 2,600명 대상
- (해설서 발간) 행정법 이론, 판례, 적용사례, 관련 법적 쟁점까지 포괄한 종합실무지침인 '행정기본법 해설서' 제작·배포('21.12., 3,000부)
- (홍보) 법제처 6개 SNS 채널(유튜브, 트위터 등) 및 보도자료·기고 등을 통해 「행정기본법」 지속 홍보 및 리플렛 제작·배포(20,000부)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시행령 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21.9.)
- (개별법 정비)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제도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개별법의 정비방안 조사·연구* 완료('21.5.~11.) 및 정비 기본방침 수립('21.12.)
 - * 총 4개 과제(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연구
- (입법영향분석) 현행 법령의 입법의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 부처 수요조사 실시('21.9.) 및 분석 대상* 확정(제1회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 * ❶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공공재정환수법), ❷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환경영향평가법), ❸'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분석(도로교통법)
- (위원회 운영)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1회 전체회의 개최*(12.3.)
 - * 2022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계획안,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안 등 심의

③ 법제업무정보화지원 단위사업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구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 * 일일평균 이용자: 50만명('19년) → 59만명('20년) → 69만명('21년)
 - * 법령정보 제공량: 405만건('19년) → 432만건('20년) → 455만건('21년)
 - *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관: 892개('19년) → 980개('20년) → 1,073개('21년)
-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350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 규정 2천여 건을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 ‘내가 찾은 법령 목록 관리’ 기능, 전체화면 보기 기능, 조문 선택 읽기 등을 추가하여 제공하여 450만 건에 달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지속 개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과 협업하여 인터넷망 DB서버 자원을 64core(기존 32core)로 증설하고, 검색서버를 총 24대(기존 4대) 도입을 완료하여 시스템의 수용능력 강화
-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반영하여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 예산 수립 및 '22년 예산 확보(23억)
- 법령정보법의 시행('20.12월~)에 따라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정보 생산기관 간 협업을 통한 법령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 및 법령정보 정책 공유·의견 수렴
- 정부입법시스템과 성별영향평가지시스템, 관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법제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One 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4 법제전문성향상 단위사업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공무원의 법령입안·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법제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행정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여
 - 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법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 필요, 법제교육 수요 급증
 - '24년 법제교육원 개원 이후 공백 없는 교육운영 및 효과적인 법제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 실시 및 안정적 교육수요확보 노력
 - 중복 과목 조정 등 기존 교육과정 재정비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맞춤형 강의 신규 개설을 통한 공직자 법제역량 강화 지원
 - 행정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행정기본법 해설 및 강의 실시를 통해 일선 공무원의 기본법 지식과 법 역량 강화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교육 위주의 법제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전환·운영하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교육 환경 조성
- 2~3차시 분량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수준의 법제지식 과정인 집합연계 과정(미니이러닝) 운영을 통해 비대면 교육환경에서의 교육 효과성 제고
-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용적 법제교육 실현
-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대상으로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등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안내하는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연 도	교육훈련 실적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연간 교육일수	실력 향상도	만족도
2018년	50	442	22,629	617	92.5	91.2
2019년	55	489	24,510	694	92.8	91.8
2020년	53	287	14,093	476	92.6	91.8
2021년	58	669	34,960	863	92.0	92.6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코로나 19에 따른 대면 교류 제약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법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류협력 토대 구축
- 베트남 법무부 법제교류협력 영상회의(21.7.)를 통해 신남방 주요국가인 베트남과 한국의 우수한 법제 성과를 공유하여 양국 법제교류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 확대
- '20년 송부한 법제실무 교육 영상을 기반으로 한-인니 법제실무 영상 세미나(5회)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증진 및 법제역량 강화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영상회의(21.11.)를 통해 인니 측 법제 동향 및 향후 법제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여 양국 법제교류협력사업 구체화
- 인니 법제공무원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21.5.~10.) 및 규제법제 관련 한국의 우수한 법제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인니 법제전문기관 설립 지원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개최('21.10.)
 - 행정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우수한 한국의 법제 행정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회의 개최
 - 코로나19로 외국 연사 및 일반인 초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상회의와 온라인 생중계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 * (회의 참여자 수) '18년 200여명, '19년 300여명, '20년 1,300여명, '21년 국내외 1,400여명

II. 향후 재정투자계획

1.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 법령정보제공 사업

- 법령 및 법제처의 주요 정책 홍보 시 미디어 이용형태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온라인 홍보 비중을 더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
- 어린이·청소년의 준법 정신 제고 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홍보 부족 및 청소년 법제관 대상 학교 제한 등에 관한 외부 지적이 있어 홍보 강화 및 청소년법제관 대상학교 확대 필요
- 시각자료를 통한 정보습득이 점차 일반화되는 환경에 따라, 문자 중심의 법령정보에 더하여 다양한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법령의 실질적 이해를 돕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의 고도화 필요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한-ASEAN 교류 협력 등 우리 국민·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감염병 관련 법령 등 전 세계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공공기관의 해외법령 정보 수요 지속적 증가
- 국가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주요 법령의 정확한 번역 정보 제공 필요성 증대
- 행정 분야 남북법제 통합 방안에 대한 큰 틀의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는바, 법령용어 등 세부 연구 분야 발굴 통해 심화연구 지속 필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법령 수 급증) 미확인·불확실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시대'에서 정확하고 검증된 법령정보를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전달할 의무 증대
 - 단순 나열식의 법령정보 제공이 아닌 국민의 수요를 고려한 카드뉴스, 해설형, 질의응답 콘텐츠의 확대로 타 서비스와 차별성 강화 필요
- (국민참여 증가) 국민 권리의식 신장, 민원업무의 직접 수행 증가에 따라 허가·신고 등 민원 및 정책 참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유료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차별 없는 법 접근성 보장을 위해 책자 등 오프라인 서비스 병행 필요
- (다문화사회 진입) 국내거주 외국인(약 230만명)의 근로계약·이혼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번역·해설된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외국어 생활법령은 소송·신고 등 전에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국내 법령을 모국어(12개 언어)로 볼 수 있는 법령정보 1차 플랫폼으로 기능
 - 국내 법 체계·용어가 낯선 외국인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서 제공·안내해주는 '맞춤형 외국어서비스' 강화 필요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사업

- 법령은 국가체제의 산물로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각 행정기관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령정보(현행법령집)를 보유하고 제공*할 필요
 -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발간·보급 의무
 - ** 필수 보유기관(「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 법령집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추록 발행이 필요하지만, 현행 유상보급 형태는 법령집 발행 및 보급 업무의 대행자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로 지속적인 사업 유지가 불가능
-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추록 발행에 따른 필요최소예산을 지원하여 법령집 현행화를 유지할 필요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입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 법령 등 정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입법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 지원 필요성 증가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령체계 간 통일을 확보하면서 인공지능 발전 등 빠르게 변화하는 법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법화할 필요성 증대
- 국정과제, 코로나-19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입안 과정의 효율화'에 대한 법령 소관 부처의 수요가 급증
-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해외 입법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사례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 지원 필요성 증대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법령 입안 및 적용 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의 내용 및 기준을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확산 필요성 증가 및 정부입법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총괄 기관으로서 부처별 법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점검할 필요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코로나 19로 급격히 변화한 경제적·사회적 구조에 따라 취업난, 주거문제 등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법령정비과 차원의 검토만으로 객관적인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부처의 수용율과 정비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새로운 프로세스의 법령정비 체계 필요
-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법제업무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법제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국민참여 심사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국민참여입법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 코로나19 확산 지속시 비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참여방법 전환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사업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22. 1. 13.)에 맞춰 특별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치법규의 원활한 제·개정 지원과 자치법제지원에 필요한 법적검토기준을 정립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20년도부터 실시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의 1·2차년도 사업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3차년도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결과를 많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마련·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적극 지원 필요
-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국정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입법 활동이 증가하면서 입안지원(입법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
 - *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현황: ('10년) 76,020건 → ('21년) 116,302건
 - * 연도별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10년) 12,212건 → ('21년) 20,914건
 - * 입법컨설팅 회신건수: ('15년) 65건→('18년) 210건→('21년) 474건
- 법령에서 주요 정책의 세부내용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도 증가함에 따라 위임조례 관리·지원 업무의 중요성도 증대
 - * '17년 61건→ '18년 149건→ '19년 169건→ '20년 165건→ '21년 272건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그간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법령 수요자에 알법 정보의 확산 및 공유 필요
-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에 따라, 문장·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 증진 필요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국민은 판례나 법이론 속에 있는 행정법의 원칙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빈번한 행정쟁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초래

- 국민이 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공무원도 명확한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

대통령 지시사항(국무회의)

- (‘19. 2.)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 전체 국가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법령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여 법치행정 및 규제개혁의 원동력 마련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별법령 정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 법제도 개선 및 일선 행정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 「행정기본법」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와 행정 현장에서의 「행정기본법」 적용·집행 실태를 조사·검토하여 법 발전방향 모색
-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이의신청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총괄관리 추진(「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근거)
- * 「건축법」 제4조의2제3항(재심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 등 개별 법률(179개)의 이의신청 제도 총괄관리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현행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 등 법령정보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용시 개선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의 보완과 발전 필요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용어나 문장 검색이 가능한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필요
- 법령정보의 수집·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리걸테크(Legal-Tech) 등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민간기업의 구체적인 수요 파악
- 본격적인 지방분권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 등에 대한 적기 정비를 지원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및 검사 기능 확충 필요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24년 법제교육원 개원 이후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 콘텐츠 보완 및 신규개발을 실시하고, 장기·의무 교육과정 중심으로 잠재적 교육 수요 발굴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제교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제교육원 운영의 안정성 확보
- * 질병관리청 신규 연구사 대상 상·하반기 법제교육, 전라북도교육연수원 교육청 6급 공무원 대상 상·하반기 법제교육 등
-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령정비 과제 교육, 신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존 교육과정 고도화 및 신규과목 신설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코로나 위기 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공통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공유
 - 특히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우수한 한국 법제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법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류협력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면·비대면 교류 방식을 병용할 필요
 - 최근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보다 많은 국내외 참여자들이 활발히 소통하였으나 국제회의로써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코로나19 완화 시 해외 연사 초청 등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 병행 개최 필요

2. 정책방향

□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 지원

- ① 주요 정책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
 - 주요 입법 특별관리, 국정과제 신속 법제화 지원,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역할 강화, 주요 정책의 일괄 법령정비 지원
- ② 법제로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 신속·정확한 자문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지원, 민생 관련 법령해석 신속 회신

③ 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혁신

- 행정기본법 국회 통과 추진 및 시행 사전 준비, 입법 효율화를 위한 정부입법시스템 개선

□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개선

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 청년 권익 증진 등을 위한 법령정비, 금전 납부 법령 정비, 인·허가 규제관련 행정규칙 정비

②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심사·정비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령-조례 영향검토제 실시

③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 구축, 알기 쉬운 행정규칙 및 조례 만들기(2년차) 추진

□ 국민·세계와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① 국민이 신뢰하는 법령해석 서비스

- 해석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② 생활밀착형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 법령정보의 관리 방식 개선, 국민 수요 높은 생활법령 콘텐츠 우선 제공, 법령정보 서비스 접근성·활용성 제고

③ 세계로 나아가는 K-법제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등을 통한 신남방 정책 추진 지원

3. 재정운용방향

□ (일반행정 부문)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알기 쉬운 입법예고: 뉴미디어 중심의 홍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광고 비중을 늘려 효과적인 홍보 추진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법령을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만화 콘텐츠로 제작하여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스마트폰 보급·이용률 확대에 따라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
- 법제정책 알리기: 국민생활에 유용한 법령 정보 및 법제처의 주요 정책 제공에 중점을 두되, 뉴미디어 추세를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3D)의 콘텐츠

개발과 영상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확대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어린이·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준법정신 함양 도모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정보로 개발·지속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하게 보고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법' 체계를 마련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주요 국가의 중점관리대상법령 및 맞춤형 신청 법령 중심으로 번역본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해외 법령 번역 시 신속한 작업, 오류 최소화 등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번역 솔루션 활용으로 제공 서비스 품질 제고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중기부, 산업부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다양한 홍보 실시로 서비스를 확산하고 기재부에서 구축한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에 연계하여 해외진출관련 정보 통합 제공에 기여
 - 각 기관별 법령 번역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중복 번역 방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 법령 번역 추진
 - 번역된 법령이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 따라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감수를 통해 번역 품질 관리
 - 향후 남북법제 통합 시 법령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분야별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 연구 수행
 -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법제 유관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소통·협업
- * '22년 예산 855백만원 → '23년 요구 1,604백만원(증749백,+87.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국문 콘텐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사회 속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다양화
 - 법령정보의 접근 및 이해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게 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 개발 확대

- (외국어 콘텐츠)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법률분쟁 관련 번역 법령정보 개발을 통하여 **외국인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법령정보의 직접적 지원**
 -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사소송 등 법률분쟁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번역·제공
 - 외국어 법령정보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번역 품질 검수 및 외국어 맞춤형 서비스('20. 4월 개시)의 강화
- (홍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정보취약 계층·청소년·주한 외국인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의 법령 접근성 보장**하고 **국민의 법인식 제고**
 - * '22년 예산 1,049백만원 → '23년 요구 1,425백만원(증376백,+35.8%)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 법률상의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의무 준수 및 국가적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적자 누적으로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법령집 발행·보급 사업의 최소필요예산 지원
- 법령집 추록의 발행·보존은 법치주의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법령 접근권 보장과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한 사실상의 의무지출 사업
 - 종이 형태의 현행법령집 발행·보급은 지진, 사이버 테러 등 재난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전자매체 이용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령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함
 - * '23년 요구 604백만원(604백,순증)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안의 입법지원, 심사, 국회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
 - 적절하고 신속한 입법 기준 마련을 위해 해외 입법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법사례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연구 기능 강화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되도록 입안 단계부터 법제 전문가가 조문화를 지원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등 입안 과정의 효율화를 도모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법령 입안 및 적용 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 확산과 정부 부처의 법제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코로나 19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겪은 청년세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정비과제 발굴·정비
-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민간전문가, 제도개선기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결정 안건에 대해 법제처가 개정완료까지 전 과정을 신속·일괄로 추진하는 법령정비 체계 마련
-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법제업무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심사제 실시 등 국민참여입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과 조화되고, 자치입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응답해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 및 홍보 등 지속 실시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자치법제 지원을 위해 제도 운영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과정에서 자치법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 공식적 의견제시 제도와 병행하여 유선 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창구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집행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자치법제상담 119’ 지속 운영
- 조례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 입법 체계상 부적절한 조례 정비 추진
- 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지원의 현장성 강화
-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필요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법제화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 입안 체계 확립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지속 발간하여 배포
-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새롭게 발간되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 제·개정된 「행정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추진
-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담당자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의문점 및 애로 사항 해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밀착형 입법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법제역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위임조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국가 주요정책의 세부 내용이 위임조례에 따라 집행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위임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인력 운영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부처협약안 전수 검토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 사전 차단
-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입법예고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운영을 통해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제고

-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대상 조례안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상시 검토 수행
- 현행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정비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정비
- 국민 상당수가 법령 용어뿐만 아니라 법령 문장 및 법체계의 전문성·복잡성으로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현실에 따라, **법령 정비 방식을 '문장 및 체계 정비'로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법령 이해도 증진
-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 알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알법 사업 기초 자료 DB** 구축 및 **알법 앱** 구현 및 **브랜드화** 추진
- * '22년 예산 1,521백만원 → '23년 요구 1,554백만원(증33백,+2.2%)

○ 행정법제 혁신

-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제도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개별법 정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지속 추진
- 「행정기본법」 제정 시 담지 못한 사항,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법제 정립, 학계·법조계 요청사항, 국민제안 사항 등 신규의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행정기본법」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 * 영업자 지위 승계, 공법상 계약의 종류, 하자의 승계, 부분 인허가의제 등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정비 추진 강화
-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이의신청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총괄관리 추진(「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근거)
- * '22년 예산 470백만원 → '23년 요구 735백만원(증+265백,+56.4%)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5년간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및 서비스 확대 제공
-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용어간 연계, 법령간 관계를 정의하는 법령정보 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 입력 키워드 형태소 분석, 문장구문 검색, 연관법령 검색과 추론과 학습을 통해 지능형(AI)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법령정보 관리 수행, 이용 현황·통계 분석으로 사용자 특성에 따른 UI/UX 적용, 웹·모바일 환경 서비스 개선
- 정부입법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모니터링 등 관련 SW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 장애 발생 방지 및 서비스 연속성 제고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장기 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실습형·체험형 강의를 심화과정으로 개발하는 등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담당하는 신규인력에 대해 행정기본법, 조례 제·개정 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입안실무 등의 교육 실시하는 등 지방의회 직원의 법제역량 강화 및 주민의 법제지식 함양 지원
- 이론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 강의안을 개편하고 사례 중심 과정을 확대 개설하는 등 공직자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 내용 구성 추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주요 법령 교육과 예비법조인 등의 법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 지속 실시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우리 법제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제교류협력 추진
-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면·비대면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 경험·노하우를 공유·전파
- 다양한 외국법제기관과의 고위급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법제교류협력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제교류협력 추진

- 법제처와 유사한 기능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법제교류협력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기업에게 친숙한 법제 환경 마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발전

-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및 결과 활용도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해당 주제로 ALES 개최하는 등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과 ALES 연계 추진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9회 ALES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 및 해외 연사 초청 등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회의 접근성 제고 및 내용 내실화 추진
- * '22년 예산 277백만원 → '23년 요구 307백만원(증30백,+10.8%)

<참고> '21~'25계획 vs '22~'26계획 대비표

구분	'22~'26 계획	'21~'25 계획
여건변동 사항	▪ 법령 및 법제처의 주요정책 홍보 시 미디어 이용형태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온라인 홍보 비중을 더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필요 ▪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취업난·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와 생계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 정비 필요 ▪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위하여 법령정비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22. 1. 13.)에 맞춰 특별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치법규의 원활한 제·개정 지원과 자치법제지원에 필요한 법적 검토기준을 정립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20년도부터 실시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의 1·2차년도 사업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 국민이 법을 알지 못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입법예고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적시에 국민이 알기 쉽게 홍보 ▪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습 효과도 높이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접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개발 필요 ▪ 청소년법제관의 진로탐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기관 종사자와의 간담회 등 법 관련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 관련 직종의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도록 지원 ▪ 미확인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시대'에서 정확하고 검증된 법령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의무 증대 ▪ 국민의 민원업무(소송, 등기 등)의 직접 수행 증가에 따라 민원 및 정책 참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내거주 외국인의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번역·해설된 국내 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미확인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

	3차년도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의 완성을 높이고, 사업 결과를 많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치법규 마련·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적극 지원 필요 ▪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개별법령 정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입법영향분석 및 이의신청 제도 총괄관리 추진	시대에서 정확하고 검증된 법령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의무 증대 ▪ 공통적 자치입법 현안에 대하여 적기에 의견제시 및 입법지원을 제공하여 입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자치입법 현안해결 지원 필요 ▪ 총 11만개에 달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입법체계 정비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치법제 관련 정보 공유 및 자치법제 발전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협업 기회 확대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조례 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민·학계·법조계·공무원 등 대상 공청회,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중기 투자 방향	일반 행정 부문 ▪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의 제공을 위한 영상 제작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3D 등)의 법제처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강화하여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통한 법령 홍보 확대 ▪ 모바일·동영상 중심의 홍보환경과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모전과 참여형 이벤트 등 국민 소통 콘텐츠의 제작 확대 ▪ 사업 성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본격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 추진 ▪ 국민·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현지 법령정보를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법령의 완역본 확대 필요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법제교류 방식 병행 필요 ▪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법제교류 협력 대상 국가의 외연 확대 필요	▪ 모바일·동영상 중심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포맷의(시트콤·웹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및 법제처 캐릭터를 활용한 국민 참여·소통형 콘텐츠로 법령 정보 및 법제처 사업 홍보 ▪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법령 제공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 정보제공” 사업 신규 추진 ▪ 맞춤형 다국어 서비스의 언어권을 확대하고, 주한 외국인의 행정민원 및 법률분쟁 등에 필요한 법령정보 콘텐츠 개발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법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책자 발간·홍보 병행 ▪ 인니 신남방 공무원 대상 법제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 포함됨에 따라 이의 적극

	▪ 외국인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개발을 확대하고, 콘텐츠 품질 향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법령정보 활용도 및 만족도를 향상 ▪ 이견 대립 있는 의원발의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 243개 지자체 및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자치법규 용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입법체계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 품질을 제고하며, 법령-조례-규칙간 위임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대한 종합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지원의 현장성 강화 ▪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활성화,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확대 및 이의신청 제도 총괄관리 추진 ▪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에 대한 법령정보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행령(‘23년), 시행규칙(‘24년)으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확대 및 업그레이드	이행 필요 • 인니 외 신남방 정책 국가 법제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함 ▪ 검증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도록 콘텐츠 구성 다양화 ▪ 정부의 주요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국정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 필요 ▪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육성 및 자치법규 체계 정비 필요 ▪ 모범 자치입법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 자치입법 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 차세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이행 과제 추진
--	---	---

4. 성과목표(지표)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 분	'21(실적)	'22	'23	'24	'25	'26
○ 법제처 공식 SNS 고착수(명)	123,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실적(건)	1,104	1,150	1,200	1,250	1,300	1,35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일일 방문자수(명)	63,198	65,000	67,500	70,000	72,500	75,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점)	89.6	90	90.5	91	91.5	92
○ 법령입안지원 실적(건)	309	312	317	322	327	332
○ 법령정비과제의 부처 수용률(%)	79.1	-	-	-	-	-
○ 불합리한 법령 발굴 실적(건)	536	520	530	540	550	560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괄 정비안 등 마련 실적(건)	215	220	225	230	230	230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실적(건)	480	444	447	450	450	450
○ 자치법규 의견제시 반려율(%)	10.8	8.5	8.4	8.3	8.2	8.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8.6	88.7	88.7	88.8	88.8	88.9
○ 법령정보 공동 활용기관 증가수(개)	93	95	95	97	97	99
○ 정부입법센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점)	83.3	84.5	85.5	86	86	86
○ 법령안편집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점)	82.4	83.5	84.5	85	85	85
○ 연간 법제교육 참가자 실 인원수(명)	34,960	25,000	28,000	20,000	22,000	23,000
○ 법제교육 참가자 만족도(점)	92.6	92.6	92.7	92.8	92.8	92.8
○ 법제교육 전후 실력 향상도(점)	92.0	92.1	92.2	92.3	92.3	92.4

Ⅲ. 재정혁신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IV. 중기 지출계획

1.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기금)	단위사업	'22 예산	'23	'24	'25	'26
일반·지방행정					43,194	50,246	52,378	54,309	55,954
일반행정					43,194	50,246	52,378	54,309	55,954
▪ 정부입법 총괄·지원					43,194	50,246	52,378	54,309	55,954
(일반) 법제정보서비스					4,081	5,810	6,038	6,276	6,527
(일반) 정부입법 총괄·관리					2,412	2,815	3,035	3,445	2,945
(일반) 법제전문성향상					1,498	2,934	3,241	3,371	3,438
(일반) 본부인건비					22,142	23,692	25,350	27,125	29,024
(일반) 본부기본경비					4,186	4,312	4,441	4,574	4,711
(일반) 정책연구개발(R&D)					74	120	120	120	120
(일반) 법제업무정보화지원(정보화)					8,801	10,563	10,153	9,398	9,189
□ 총지출(A)					43,194	50,246	52,378	54,309	55,954
※ 내부거래지출(B)					—	—	—	—	—
보전지출(C)					—	—	—	—	—
□ 총 계(A+B+C)					43,194	50,246	52,378	54,309	55,954

2. 지출변동 내역

(1) 법제처 지출변동 개요

□ '22~'26계획 총지출은 '21~'25계획 대비 연평균 2.0% 수준 증가

○ '22~'26계획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7%('21~'25계획 연평균 증가율 4.7%)로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1~'25계획보다 증액하여 계획 수립

- ①법제교육원 준공 대비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개발 및 개원 준비 추진, ②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2년차), ③법률상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의무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등을 위하여 연평균 39.7억원 수준으로 지출 증가

< 법제처 지출변동 총괄표 >

(단위 : 억원, %)

구 분	'21	'22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 총 지 출							
▪ '21~'25 계획(A)	407.3	431.9	452.4	470.3	489.4		4.7
▪ '22~'26 계획(B)		407.4	515.9	553.8	548.3	567.2	6.7
증감(B-A)		△24.5	63.5	83.5	58.9		2.0
○ 예 산							
▪ '21~'25 계획(A)	407.3	431.9	452.4	470.3	489.4		4.7
▪ '22~'26 계획(B)		407.4	515.9	553.8	548.3	567.2	6.7
증감(B-A)		△24.5	63.5	83.5	58.9		2.0
【일반지방행정 분야】							
▪ '21~'25 계획(A)	407.3	431.9	452.4	470.3	489.4		4.7
▪ '22~'26 계획(B)		407.4	515.9	553.8	548.3	567.2	6.7
증감(B-A)		△24.5	63.5	83.5	58.9		2.0
<일반행정 부문>							
▪ '21~'25 계획(A)	407.3	431.9	452.4	470.3	489.4		4.7
▪ '22~'26 계획(B)		407.4	515.9	553.8	548.3	567.2	6.7
증감(B-A)		△24.5	63.5	83.5	58.9		2.0

(2) 부문별 지출변동 세부내역

□ 법제처는 일반행정 부문 1개로 구성되어 '22~'26계획 총지출은 '21~'25 계획 대비 연평균 2.0p% 수준 증가

- '22~'26계획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7%('21~'25계획 연평균 증가율 4.7%)로 '21~'25계획보다 증액하여 계획 수립
- ①법제교육원 준공 대비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개발 및 개원 준비 추진, ②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2년차), ③법률상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의무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등을 위하여 연평균 39.7억원 수준으로 지출 증가

< 일반행정 부문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1	'22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 일반행정 부문 >							
▪ '21~'25 계획(A)	407.3	431.9	452.4	470.3	489.4		4.7
▪ '22~'26 계획(B)		407.4	515.9	553.8	548.3	567.2	6.7
증감(B-A)		△24.5	63.5	83.5	58.9		2.0
(정부입법 총괄 지원 프로그램)							
▪ '21~'25 계획(A)	407.3	431.9	452.4	470.3	489.4		4.7
▪ '22~'26 계획(B)		407.4	515.9	553.8	548.3	567.2	6.7
증감(B-A)		△24.5	63.5	83.5	58.9		2.0

참고 1**완료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 해당사항 없음

참고 2**신규사업 전체 리스트(총지출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22예산	'23예산(안)			비 고 ¹⁾
		당초	요구	검토	
합 계					
일반회계 계					
○ 대한민국헌행법령 집 발행·보급사업	-	-	6.04		예타 대상 아님

참고 3**보조사업 전체 리스트**

○ 해당사항 없음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 법제처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해당사항 없음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22~'26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518.5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6.7%)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2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22~'26 계획	407.4	515.9	553.8	548.3	567.2	6.7
【 일반행정지방 분야 】						
▪ '22~'26 계획	407.4	515.9	553.8	548.3	567.2	6.7
(일반행정 부문)						
▪ '22~'26 계획	407.4	515.9	553.8	548.3	567.2	6.7

(2) 의무·재량지출 관리계획

① 의무지출 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② 재량지출 관리계획

☐ '22~'26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연평균 512.2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6.7%)

- 예산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1~'25계획 연평균 증가율 4.7%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획 수립

4. 국정과제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V. 프로그램별 설명서

정부입법 총괄 지원

(분야)일반지방행정 - (부문)일반행정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온라인 및 지면 광고를 이용한 입법예고 홍보를 통해 주요 정책 사항을 포함한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홍보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제정·개정 법령안 및 법령해석사례 등을 만화로 구성하여 시행법령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뉴미디어 매체, TV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제처의 주요 정책 홍보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및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건 강한 민주시민사회의 기반 마련
-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어려운 법령을 그림, 사진, 체계도 및 표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시각자료 형태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기존 법령정보와 함께 제공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세계법제 연구지원
 - 해외법령, 법제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요약·번역하여 국가별·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대외경제활동 지원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 연간 법령번역계획을 수립·관리하고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처 간 중복 번역의 비효율성 해소

- 남북법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
- 남북 간 상이한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국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 법령정보를 **수요자중심별로 재구성**하고, **쉽게 해설하여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들이 정착에 필요한 법령을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12개국 언어로 번역·해설한 법령정보 제공**
- **정보취약계층**(노년층, 저소득층 등)이 개인상황별로 필요한 법령·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생애주기별·주제별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국내법령 검색·이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다국어 서비스** 실시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사업(신규)

- **법률상**(「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현행 법령집 편찬·발행 및 보급 의무의 수행**을 위한 법령집 수록 발행 및 보급
- 별도 예산보조 없이 법령집 수록 발행·보급을 유상으로 지속해왔으나 계속되는 적자 발생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 발행 업무 중단 시 법률상 의무 위반 결과 발생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집 발행·보급 대행자로 지정된 (재)한국법령정보원의 현행 법령집 수록 발행·보급에 대한 예산 보조 및 관리·감독 필요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민생·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

-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령안에 대해 법제 전문가가 입안 단계부터 조문화를 지원하고 법리적 쟁점 검토를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도모
-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입법 기준 마련 등 입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기능 강화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적극행정 법제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의 내용 및 기준을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확산하고, 부처 법제업무를 지원·점검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집하고 검토·연구하여 각종 법령 속의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 국민법제관, 국민참여심사제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국민체감형 법제개선 추진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업

-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조례-규칙간 위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조화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조성
-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침으로써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법령을 일반 국민 위주의 법령으로 전환

○ 행정법제 혁신

-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제도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개별법 정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지속 추진
- 「행정기본법」 제정 시 담지 못한 사항,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법제 정립, 학계·법조계 요청사항, 국민제안 사항 등 신규의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행정기본법」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 * 영업자 지위 승계, 공법상 계약의 종류, 하자의 승계, 부분 인허가의제 등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정비 추진 강화
-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이의신청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총괄관리 추진(「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근거)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법령과 연혁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서비스하여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입법예고 및 법령안편집기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참여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법제교육) 공무원·공공기관 등 법제 실무자의 법령 입안 및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관련 법령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체계적인 법제교육 실시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법 관련 학자, 인문·교양 전문가를 초빙한 체계적인 처내교육훈련을 통해 입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모임(CoP)을 중심으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교류를 실시하며, 해외 선진법제를 체험함으로써 법제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법제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수요국의 법제발전을 도모하고, 기관장급 및 실무자급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국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
- 아시아 각 국의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아시아 각 국의 법제 개선사항 및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협력사업 추진
- 고위급 정례협의체 운영 및 회의 개최를 통해 법제교류협력 국가 간 법제 분야 상호 이해증진

□ 기대효과

○ 법령정보제공 사업

- 입법예고 중인 제정·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바일 등에 매일 8~32건(연간 총 200건 이상) 광고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입법과정의 민주성 도모
- 국민 생활에 유용한 법령 중 새롭게 바뀌는 법령내용과 관련 정책, 법령해석사례 등을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매일 1회 전국 지차체 및 우체국 등에 약 12,000부씩 배포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 제고
-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 등의 온라인 매체 및 TV·라디오·신문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각종 법령 정보와 법제처 주요 사업을 카드뉴스·동영상·기사형 콘텐츠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적극 홍보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준법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중심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된 개별법령의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및 용어에 대해서 그림·사진·표 등의 시각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 세계법제 연구지원

- 우리 국민·중소기업이 필요한 해외법령 맞춤형 제공으로 해외진출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에 해외 사례 적시 제공하여 정부 정책 수립 지원
- 국민·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외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 주요 법령의 번역을 통하여 정책의 대외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수립, 번역기준을 기반으로 한 감수를 통해 법령의 중복 번역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소 및 번역 품질 제고

- 남북법제 연구

- 남북법제 정비 및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으로 통일 시 법령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등의 상이성, 법령용어의 의미와 해석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비
- 남북법제 유관기관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결과를 축적·관리하여 향후 통일 시 남북한 법제 분야 통합의 기반 마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일상생활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법령 접근성 보장 및 법인식 제고

- 생애주기별·주제별 맞춤형 서비스, 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책 이해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의 국내 법령 검색·이해를 지원하여 주한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의 기반 마련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사업(신규)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현행 법령집 편찬·발행 및 보급 의무의 이행
-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법령정보접근권 보장 필요, 특히 디지털 기기나 전자매체에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령접근성 확보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
- 재난 및 전시상황, 전후복구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

○ 법령심사지원 사업

- 법령심사지원 사업

- 신속한 입법지원을 통해 민생·국정과제 정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도모

- 법령입법지원 사업

-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과 심사 과정을 효율화하고 올바른 법제 문화 정착에 기여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 법령안 등에 대한 입안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정책의 적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

- 행정 일반에서의 적극행정 법제의 정착·활용을 확대하고 법제업무 지원 체계를 통해 부처 친화적인 법제업무 환경 구축

○ 법제정비 사업

- 법령정비 사업

-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국민법제관, 국민참여심사제 등 국민이 법제 업무에 참석하는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업

- 자치법규 입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법체계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실현 강화에 기여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

- 국민이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함
- 공무원·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법 접근성 및 법령 활용에 대한 차별을 해소

○ 행정법제 혁신

- ‘행정법 일반원칙 명문화’,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기준 제시’, ‘유사·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의무 명시’ 등을 통해 국민 권리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별법령 정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 법제도 개선 및 일선 행정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 추진절차 : ❶법 개정 필요사항 및 개별법령 정비방안 조사·연구, 입법영향분석 ⇨ ❷개정안 및 정비방안 등 도출 ⇨ ❸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의결 ⇨ ❹개정안 및 정비방안 확정 및 부처 협의 ⇨ ❺법 개정 및 개별법령 정비 추진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 서비스하여 법령·판례 등을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입력 키워드 형태소 분석, 문장구문 검색, 연관법령 검색과 추론과 학습을 통한 지능형(AI) 검색 시스템 제공
- 입법단계마다 반복해서 작성하는 개정문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문 등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법령안 입안·심사 기간을 단축
- “법령안 입안·심사 기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 법령안 작성 방법에 대한 학습, 숙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보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가능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 (법제교육) 공무원·공공기관 등 법제전문성 강화 및 공직사회의 법치주의 확산을 통한 공직신뢰도 제고로 국정 현안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기대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법제처 직원의 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법제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상시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양·외국어 교육 등 직원들의 품격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 제공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학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교류를 촉진하고 법제처 내 자발적인 연구·학습활동 지원

○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 외국 법제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정례적 교류 강화, 법령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우리법제의 세계화에 기여
- 외국 법제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및 워크플랜 수립 등을 통한 협력 활동 이행으로 법제 분야의 교류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
- 우리 법제에 기반한 무형의 사회기반시설(Invisible SOC)을 정착시킴으로써 해외진출 기업과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거주 및 투자 친화적 여건 조성
-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ALES)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당면 법제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지역 다양한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법제교류협력 수요 확대 및 구체적 협력사안 발굴 등 추진동력 확보

	'20실적	'21실적	'22	'23	'24	'25	'26
■ 법제처 공식 SNS 고객수(명)	92,588	123,459	140,000	150,000	16,000	170,000	180,000
■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실적(건)	<u>1,020</u>	<u>1,104</u>	1,150	1,200	1,250	1,300	1,350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일일 방문자수(명)	<u>53,330</u>	<u>63,198</u>	65,000	67,500	70,000	72,500	75,000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점)	<u>88.7</u>	<u>89.6</u>	90	90.5	91	91.5	92
■ 법령입안지원실적(건)	<u>275</u>	<u>309</u>	312	317	322	327	332
■ 법령정보과제의 부처 수용률(%)	<u>78.4</u>	<u>79.1</u>	-	-	-	-	-
■ 불합리한 법령 발굴 실적(건)	<u>601</u>	<u>536</u>	520	530	540	550	560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괄 정비안 등 마련 실적(건)	<u>243</u>	215	220	225	230	230	230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실적(건)	<u>525</u>	<u>480</u>	444	447	450	450	450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실적(지자체 수)	-	-	-	-	-	-	-
■ 자치법규 의견제시 반려율(%)	<u>5.6(신규)</u>	<u>10.8</u>	8.5	8.4	8.3	8.2	8.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u>88.5</u>	<u>88.6</u>	88.7	88.7	88.8	88.8	88.9
■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관 증가수(개)	<u>85</u>	<u>93</u>	93	95	97	97	99
■ 정부입법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점)	<u>82.3</u>	<u>83.3</u>	84.5	85.5	86	86	86
■ 법령안편집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점)	<u>81.4</u>	<u>82.4</u>	83.5	84.5	85	85	85
■ 연간 법제교육 참가자 실인원수(명)	<u>24,310</u>	<u>34,960</u>	<u>25,000</u>	<u>28,000</u>	<u>20,000</u>	<u>22,000</u>	<u>23,000</u>
■ 법제교육 참가자 만족도(점)	<u>91.8</u>	<u>92.6</u>	<u>92.6</u>	<u>92.7</u>	<u>92.8</u>	<u>92.8</u>	<u>92.8</u>
■ 법제교육 전후 실력 향상도(점)	<u>92.8</u>	<u>92.0</u>	<u>92.1</u>	<u>92.2</u>	<u>92.3</u>	<u>92.3</u>	<u>92.4</u>

(2) 프로그램 내역

(단위 : 백만원, %)

	'22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정부입법 총괄·지원(프로그램)	43,194	50,246	52,378	54,309	55,954	6.7
<일반>	43,194	50,246	52,378	54,309	55,954	6.7
□ 본부인건비(단위사업)	22,142	23,692	25,350	27,125	29,024	7.0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2,142	23,692	25,350	27,125	29,024	7.0
□ 본부기본경비(단위사업)	42	43	44	46	47	3.0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640	1,689	1,740	1,792	1,846	3.0
▪ 기관운영기본경비	2,546	2,622	2,701	2,782	2,866	3.0
□ 법제정보서비스(단위사업)	4,081	5,810	6,038	6,276	6,527	12.5
▪ 법령정보제공	2,177	2,177	2,430	2,481	2,483	3.3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55	1,604	1,276	1,323	1,347	12.0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1,049	1,425	1,728	1,868	2,093	18.8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0	604	604	604	604	순증
□ 정부입법 총괄·관리(단위사업)	2,412	2,815	3,035	3,445	2,945	5.1
▪ 법령심사지원	421	421	421	421	421	0.0
▪ 법제정비	1,521	1,659	1,879	2,289	1,789	4.1
▪ 행정법제혁신	470	735	735	735	735	11.8
□ 법제전문성향상(단위사업)	1,498	2,934	3,241	3,371	3,438	23.1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221	2,627	2,926	3,046	3,106	26.3
▪ 외국법제기관교류	277	307	315	325	332	4.6
□ 법제업무정보화지원	8,801	10,563	10,153	9,398	9,189	1.1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8,801	10,563	10,153	9,398	9,189	1.1
□ 정책연구개발(단위사업)	74	120	120	120	120	12.8
▪ 법제정책연구개발(R&D)	74	120	120	120	120	12.8

(3) 지출변동 내역 및 사유

① 법령정보제공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석경주, 044-200-6512, 7급 박민주, 044-200-6518)

(담당자: 7급 백선주, 044-200-6583, 7급 윤성용, 044-200-6582)

(담당자: 5급 강창현, 044-200-6855, 6급 신호정, 044-200-6857)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 알기 쉬운 입법예고: 온라인 및 지면 광고를 이용한 입법예고 홍보를 통해 주요 정책 사항을 포함한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홍보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제정·개정 법령안 및 법령해석사례 등을 만화로 구성하여 시행법령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법제정책 알리기: 뉴미디어 매체, TV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제처의 주요 정책 홍보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운영: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연간 모집하여 법제교육 및 다양한 입법체험활동(토론대회, 법 관련 퀴즈 대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자료를 함께 제공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령정보제공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1,874	3,342 (78.3)	2,516 (-)	2,516 (-)	2,516 (-)		(19.58)
'22~'26요구 (증가율)		2,177	2,177 (-)	2,430 (11.6)	2,481 (2.1)	2,483 (0.1)	(3.5)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알기 쉬운 입법예고: 지면 신문 광고안의 디자인 개편 및 온라인 광고 확대를 위한 홍보비 10백만원 증액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새로운 만화 콘텐츠 도입, 유명작가 섭외 등 기획 및 구성을 개선하여 만화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우체국·민원실 등 다중 집합장소 등에 대한 발간물 배포와 함께 온라인·모바일 홍보 확대를 위한 지출소요 24백만원 증액
- 법제정책 알리기: 법제처의 주요 정책 및 주요 법령정보 콘텐츠 개발과 영상 콘텐츠 제작 강화를 위한 제작비, 광고비 등 97백만원 증액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홍보 확대 및 청소년 법제관 대상학교 확대 등을 위해 96백만원 증액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주요 현안 등 국민 관심 법령에 대한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가 및 국민 자문단의 의견 등을 수렴한 한눈보기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6백만원 등 반영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2,516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7.3백만원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광고제작비 6회 × 2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7.4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1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00백만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443백만원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17.42백만원 ·지원인력 보수 1명 × 27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02백만원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지원인력 1명 x 33.4백만원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20.6백만원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8.75백만원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9.9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1,017백만원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개 법령 x 10.2백만원 ·홍보비 2회 x 8백만원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50백만원 ·시스템 구축비 1식 x 568백만원
	'22~'26(요구)	2,177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7.3백만원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광고제작비 6회 × 2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7.4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1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00백만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443백만원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17.42백만원 ·지원인력 보수 1명 × 27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02백만원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지원인력 1명 x 33.4백만원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20.6백만원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8.75백만원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9.9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678백만원 ·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 홍보비 x 5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28백만원 · 시스템 구축비 1식 x 568백만원
'23	'21~'25(당초)	2,516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x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7.4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1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00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443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17.4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27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0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3.4백만원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20.6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8.75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9.9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1,017백만원 ·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2회 x 8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50백만원 · 시스템 구축비 1식 x 568백만원
	'22~'26(요구)	2,177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6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8.7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디자인 개편 등) 6회 x 2.5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9.0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5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97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504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4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27.4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98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5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3.4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바일 광고 1건 x 20백만원 · 홍보 포스터·브로슈어 제작 및 발송 1건 x 20.7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8.8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9.9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451백만원 ·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2회 x 12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44백만원
'24	'21~'25(당초)	2,516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x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7.4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1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00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443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17.4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27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0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3.4백만원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20.6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8.75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9.9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1,017백만원 ·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2회 x 8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50백만원 · 시스템 구축비 1식 x 568백만원
	'22~'26(요구)	2,430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6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8.7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디자인 개편 등) 6회 x 2.5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9.0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5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830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532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20.8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27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619.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52회 x 9.1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6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바일 광고 1건 x 50백만원 · 홍보 포스터·브로슈어 제작 및 발송 1건 x 23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22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1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551백만원 ·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2회 x 12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44백만원 · 한눈보기 서비스 발전 방향 연구용역비 100백만원
'25	'21~'25(당초)	2,516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5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7.3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 6회 x 2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38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7.4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1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700백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x 443백만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x 17.42백만원 · 지원인력 보수 1명 x 27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402백만원 · 입법 체험 행사 42회 x 7.6백만원(1회 평균) · 지원인력 1명 x 33.4백만원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1건 x 20.6백만원 ·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18.75백만원 ·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9.9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1,017백만원 ·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개 법령 x 10.2백만원 · 홍보비 2회 x 8백만원 ·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50백만원 · 시스템 구축비 1식 x 568백만원
	'22~'26(요구)	2,481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68백만원 ·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8.7백만원 ·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x 11.32백만원 · 광고제작비(디자인 개편 등) 6회 x 2.5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백만원 ·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x 19.0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x 2.5백만원 ·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880백만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581백만원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20.8백만원 ·지원인력 보수 1명 × 28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620.2백만원 ·입법 체험 행사 52회 x 9.1백만원(1회 평균) ·지원인력 1명 x 37백만원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바일 광고 1건 x 50백만원 ·홍보 포스터·브로슈어 제작 및 발송 1건 x 23백만원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22백만원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1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551백만원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콘텐츠 개발 용역비 30개 법령 x 10.2백만원 ·홍보비 2회 x 12백만원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44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백만원
'26	'22~'26(요구)	2,483	- 알기 쉬운 입법예고: 168백만원 ·온라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8.7백만원 ·신문 알기 쉬운 입법예고 5회 × 11.32백만원 ·광고제작비(디자인 개편 등) 6회 × 2.5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62백만원 ·법나들이 발간 및 DM 12회 × 19.08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회 × 2.5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3.3백만원 - 법제정책 알리기: 944백만원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홍보 등 1건 × 632백만원 ·온라인 홍보 플랫폼 운영 12회 × 21.8백만원 ·지원인력 보수 1명 × 29백만원 ·기타(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2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628백만원 ·입법 체험 행사 52회 x 9.25백만원(1회 평균) ·지원인력 1명 x 37백만원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바일 광고 1건 x 50백만원 ·홍보 포스터·브로슈어 제작 및 발송 1건 x 23백만원 ·활동노트 등 참고책자 제작 및 발송 1건 x 22백만원 ·수료증 제작 및 발송 1건 x 15백만원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제공 사업: 481백만원 ·인건비 2인 x 38.5백만원 ·서비스 업데이트 및 콘텐츠 리뉴얼 용역비 12개 법령 x 10백만원 ·홍보비 2회 x 12백만원 ·전문가 자문 등 기타운영비 44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1,476	-	±101	1,476	1,454	-	22
'20	1,438	-	±67	1,438	1,394	-	44
'21	1,925	-	±62	1,925	1,874	-	51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9년	국회 (‘18회계연도 결산)	예산(여비)의 목적 외 사용 지양	‘19년도부터는 대변인실 소관 여비로 편성하여 집행함
2019년	국회 (‘18회계연도 결산)	알기 쉬운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텍스트로만 구성된 입법예고 페이지를 ‘시각 이미지 및 핵심 제목 형태’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개편함
2020년	국회 (‘19회계연도 결산)	신규 사업 홍보 집중에 따른 타 법제 홍보가 위축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홍보 시 국민적 공감 확보 및 홍보비 절감 등에 노력할 필요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홍보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알기 쉽게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법제 정책 및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함
2020년	국회 (‘19회계연도 결산)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에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함
2021년	국회 (‘20회계연도 결산)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제고 및 제도개선 방안 등 강구 필요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제고를 위해 독려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2021년	국회 (‘20회계연도 결산)	기관홍보 중심의 법제정책 알리기 홍보비 집행 부적정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균형있게 홍보하기 위해 노력함
2021년	국회 (‘20회계연도 결산)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사업 홍보방안 개선 필요	홍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입법예고 광고비 비중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함

② 세계법제정보서비스(재량지출)

(담당자: 5급 정준수 044-200-6827, 6급 조은진 044-200-6829)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세계법제 지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언어권별 연구원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국가·법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등 제공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중기부·산업부 등 유관기관 협업 및 매체광고 등을 통한 홍보로 세계법제정보센터 접근성 강화 · (법령 외국어 번역 총괄·관리) 정부부처와 민간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 법령 번역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법령 번역 체계 구축 · (법령 번역에 대한 감수) 중앙부처에서 자체 번역한 법령을 「법령 영문 번역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수하여 법령 번역의 신뢰성 및 통일성 제고 - 남북법제 연구사업 · (남북법제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국가 형성에 이바지 ※ 남북법제 연구용역 및 연구위원회 운영 · (대내외 정보제공과 소통 강화) 관계부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한 국내외 관련 기관·학계와의 협력 강화 ※ 법제처·법무부·통일부 지속적인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기간	'04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734 -	855 (16.5)	855 -	855 -	855 -	- -	- 4.1
'22~'26요구 (증가율)	- -	855 -	1,604 (87.6)	1,276 (-20.4)	1,323 (3.7)	1,347 (1.8)	- 12.0

□ 산출근거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855	- 세계법제 지원사업(71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618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9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36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2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28백만원=28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4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22~'26(요구)	855	- 세계법제 지원사업(71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618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9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36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2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28백만원=28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4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23	'21~'25(당초)	855	- 세계법제 지원사업(71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618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9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52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3백만원=9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2회×3백만원=6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7백만원

	'22~'26(요구)	1,604	- 세계법제 지원사업(1,466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633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802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2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38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4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28백만원=28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4.4백만원=13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24	'21~'25(당초)	855	- 세계법제 지원사업(71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618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9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52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3백만원=9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2회×3백만원=6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7백만원
	'22~'26(요구)	1,276	- 세계법제 지원사업(1,13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699백만원 ※ 연구원 총 13.5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1.5,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40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2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45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6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28백만원=28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4회×4.4백만원=18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25	'21~'25(당초)	855	- 세계법제 지원사업(71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618백만원 ※ 연구원 총 13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9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52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1건×40백만원=4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3회×3백만원=9백만원 · 통일대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2회×3백만원=6백만원 · 정책연구용역 수행, 평가 및 자문 수당, 여비 등 17백만원
	'22~'26(요구)	1,323	- 세계법제 지원사업(1,148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716백만원 ※ 연구원 총 13.5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1.5,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40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2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75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88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2건×28백만원=56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4회×4.5백만원=18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26	'22~'26(요구)	1,347	- 세계법제 지원사업(1,166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홍보 민간위탁사업비(1년) 734백만원 ※ 연구원 총 13.5명: (전일제) 영어3,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1.5,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독일어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 자료 제작(약 2,000부) 5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업무협약(수시출장 등) 1백만원 · 세계법제 지원 관련 사업추진비 4백만원 · 번역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가 회의 1백만원 · 법령 번역 용역 외주비 40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2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사업(181백만원) · 남북법제 전문연구원 채용 등(2명) 90백만원 · 남북법제 주요법령 통합방안 연구 2건×30백만원=60백만원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4회×4.5백만원=18백만원 ·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1회×8백만원=8백만원 · 평가 및 자문 수당 등 5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700	-	-	700	673	-	27
'20	628	-	-	628	597	-	31
'21	769	-	-	769	736	-	3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세계법제 지원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법사위 (‘17년 결산심의, ‘18년 국정감사)	○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인력 확대 필요 ○ 위탁사업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 측정 기준 합리적 재설정 필요
국회 예결위 (‘20년 예산심의)	○ 해외법령정보에 관한 번역서비스 확대 등 사업 내실화 필요
국회 법사위 및 예결위 (‘19년 결산심의)	○ 낙찰차액 활용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 대책 마련 및 기념품 지급내역 정리 할 것 ○ 해외법령 번역본 확대 및 위탁사업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남북법제 연구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19년도 예산심의)	○ 남북법제 연구용역 신규 주제 발굴 필요, 대법원, 헌법 재판소 등과 정보공유 및 협업 강화 필요
국회 (‘20년도 예산심의)	○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각 부처의 통일 대비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매칭 신규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 : 해당사항 없음

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정승택, 044-200-6781, 7급 변정현, 044-200-6788)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어렵고 복잡한 법령 정보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법령정보를 제공
사업기간	'09년 ~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 없음
사업규모 ²⁾	해당 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및 민간위탁자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1,013	1,049 (-)	1,049 (-)	1,049 (-)	1,049 (-)	1,049	-
'22~'26요구 (증가율)		1,049	1,425 (35.8)	1,728 (10.7)	1,868 (8.1)	2,093 (12.0)	(18.8)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1,049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974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2.34백만원*12월*1.3*1.1= 722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2.04백만원*12월*1.3*1.1=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7.67백만원*1.1=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2~'26(요구)	1,049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974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2.34백만원*12월*1.3*1.1= 722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2.04백만원*12월*1.3*1.1=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7.67백만원*1.1=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3	'21~'25(당초)	1,049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974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2.34백만원*12월*1.3*1.1= 722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2.04백만원*12월*1.3*1.1=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7.67백만원*1.1=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2~'26(요구)	1,425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350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3.33백만원*12월*1.3*1.1= 1,028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2명*4.08백만원*12월*1.3*1.1= 14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7.67백만원*1.1=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4	'21~'25(당초)	1,049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974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2.34백만원*12월*1.3*1.1= 722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2.04백만원*12월*1.3*1.1=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7.67백만원*1.1=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2~'26(요구)	1,728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발간 및 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517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3.37백만원*12월*1.3*1.1= 1,04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2명*4.08백만원*12월*1.3*1.1= 140백만원 · 법령민원상담 서비스 2명*4.10백만원*12월*1.3*1.1= 14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10백만원*1.1= 55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5	'21~'25(당초)	1,049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974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2.34백만원*12월*1.3*1.1= 722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반일제) 2명*2.04백만원*12월*1.3*1.1= 70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7.67백만원*1.1= 42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2~'26(요구)	1,868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발간 및 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657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3.37백만원*12월*1.3*1.1= 1,04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4명*4.08백만원*12월*1.3*1.1= 280백만원 · 법령민원상담 서비스 2명*4.1백만원*12월*1.3*1.1= 14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10백만원*1.1= 55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26	'22~'26(요구)	2,093	- 기타직보수 1명*28백만원 = 28백만원 - 생활법령 책자 발간 및 배포: 136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사단 6명*12월*0.1백만원 = 7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민간위탁사업비 1,882백만원 · 국문 콘텐츠 개발·업데이트 18명*4.1백만원*12월*1.3*1.1= 1,266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전일제) 4명*4.08백만원*12월*1.3*1.1= 280백만원 · 법령민원상담 서비스 2명*4.10백만원*12월*1.3*1.1= 14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28개*5백만원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홍보 온·오프라인 광고 5회*10백만원*1.1= 55백만원 - 생활법령 세미나 개최 2회*5.4백만원 = 11백만원 - 기타 일반수용비 등 29백만원
-----	-------------	-------	--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955	-	-	955	936	-	19
'20	1,046	-	-	1,046	1,013	-	33
'21	1,047	-	-	1,047	1,013	-	34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④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보급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정승택, 044-200-6781, 7급 변정현, 044-200-6788)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 없음
사업내용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발간 및 보급 - 법령정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제·개정된 공포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약, 일부 훈령 등 약 5,496건) 관련 현행법령을 페이지 단위로 인쇄 - 헌법기관 등 공공기관에 비치된 종이 법령집 내용 중에서 변경된 내용을 새로 공포된 현행법령으로 교체(추록)
사업기간	'2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및 민간위탁자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발간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	-	-	-	-		
		(-)	(-)	(-)	(-)		
'22~'26요구 (증가율)			604	604	604	604	
			(순증)	(0.0%)	(0.0%)	(0.0%)	순증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1*	'21~'25(당초)	-
	'22~'26(요구)	-
'22	'21~'25(당초)	-
	'22~'26(요구)	604 - 법령집 추록 발행 및 보급비: 604백만원 . 법령집 추록 제작비: 330부*1.09만면*4회*27.9원 = 402백만원 . 법령집 추록 보급비: 330부*4회*9만원 = 118백만원 . 법령집 추록 사업관리 인건비: 2명*400만원*2개월*4회*1.3=84백만원
'23	'21~'25(당초)	-
	'22~'26(요구)	604 - 법령집 추록 발행 및 보급비: 604백만원 . 법령집 추록 제작비: 330부*1.09만면*4회*27.9원 = 402백만원 . 법령집 추록 보급비: 330부*4회*9만원 = 118백만원 . 법령집 추록 사업관리 인건비: 2명*400만원*2개월*4회*1.3=84백만원
'24	'21~'25(당초)	-
	'22~'26(요구)	604 - 법령집 추록 발행 및 보급비: 604백만원 . 법령집 추록 제작비: 330부*1.09만면*4회*27.9원 = 402백만원 . 법령집 추록 보급비: 330부*4회*9만원 = 118백만원 . 법령집 추록 사업관리 인건비: 2명*400만원*2개월*4회*1.3=84백만원
'25	'22~'26(요구)	604 - 법령집 추록 발행 및 보급비: 604백만원 . 법령집 추록 제작비: 330부*1.09만면*4회*27.9원 = 402백만원 . 법령집 추록 보급비: 330부*4회*9만원 = 118백만원 . 법령집 추록 사업관리 인건비: 2명*400만원*2개월*4회*1.3=84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하원에서 회기별 법령집인 United States Code(U.S.C.) 발간, 정부인쇄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주제별 법령집인 US Statutes at Large(US Codes) 매 6년마다 개정판, 매 1년마다 증보판 발행·보급
 -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의 법제국에서 편집한 현행법령인 現行法規總覽 발간(총 138책)하고, 법무성이 교세이(민간출판사)에 의뢰하여 現行日本法規 발행
 - (독일) 연방법무부가 발간하는 공식적인 법령관보인 「연방법령관보」 및 총 36권의 가제식 법령집인 「Das Deutsche Bundesrecht」 발행
 - (영국) 정부간행물출판국(HMSO)에서 편찬한 가제식 법령집(총 54권)인 「Halsbury's Statutes of England and Wales」을 발간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에서 헌법 및 법률 법령집을, 국무원 법제공판실에서 명령·행정법규집을 발간 중

⑤ 법령심사지원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안정임, 044-200-6562, 6급 이철규, 044-200-6564)

(담당자: 5급 오정애, 044-200-6833, 6급 최인숙, 044-200-6834)

(담당자: 5급 박재민, 044-200-6565, 6급 권정아, 044-200-6569)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전시법령 인쇄, 법제업무편람 발간, 정부입법계획 수립, 국정과제 관련 입법지원 등 정부입법절차 전반 지원 ·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 정책이 입법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필요한 입법 기준을 마련 · 입법내용의 전문화, 다수 부처 관련 융·복합 법령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의 증대 등으로 각 부처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입안지원제도 운영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 적극행정 법제 전파 · 법제업무평가 실시 등 환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법제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부처 친화적인 법제업무 환경 구축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령심사지원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337	432 (21.9)	432 (0)	432 (0)	432 (0)		5.4
'22~'26요구 (증가율)		421	421 (0)	421 (0)	421 (0)	421 (0)	0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432	- 법령심사지원사업: 100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4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5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1건×4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76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30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2~'26(요구)	421	- 법령심사지원사업: 97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4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5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1건×4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68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2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3	'21~'25(당초)	432	- 법령심사지원사업: 115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3.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31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4.8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6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30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13백만원
	'22~'26(요구)	421	- 법령심사지원사업: 97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4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5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1건×4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68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2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4	'21~'25(당초)	432	- 법령심사지원사업: 115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3.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31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4.8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6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30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13백만원
	'22~'26(요구)	421	- 법령심사지원사업: 97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4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5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1건×4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68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2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5	'21~'25(당초)	432	- 법령심사지원사업: 115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8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3.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31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4.8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86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30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13백만원
	'22~'26(요구)	421	- 법령심사지원사업: 97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4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5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1건×4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68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2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26	'22~'26(요구)	421	- 법령심사지원사업: 97백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80건×0.08백만원 · 법제업무편람 인쇄 1,000부×0.015백만원 · 정부입법계획 인쇄 500부×0.004백만원×2건 ·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2.9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12월×2.4백만원 - 법령입법지원사업: 256백만원 · 지원 인력 보수 3인 × 38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770부×0.011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34회×0.6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12월×0.9백만원 · 국외출장 1회×8.7백만원 · 법령입안·심사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1건×40백만원 · 법령입법지원 기타경비 12월×3.5백만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68백만원 ·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인쇄 2,000부×0.015백만원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2회×3.5백만원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회×6백만원 · 법제업무평가 및 적극행정 법제 우수기관 포상금 1회×22백만원 · 법제업무역량강화 기타경비 3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300	-	20	320	301	-	19
'20	444	-	-	444	387	-	57
'21	370	-	-	370	337	-	3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법령심사지원 사업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0년	국회 ('19회계 연도 결산)	법률안 제출시기 조정 및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 필요	2021년도 법제업무평가 시 법률안 제출 시기 및 제출계획의 이행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음.

- 법령입법지원 사업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9년	국회 (‘18회계 연도 결산)	(예결위) 법제처는 입안지원과 법령심사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안 지원 절차와 조직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입안지원은 심사와 달리 부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안과 심사를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만, 입안지원 검토 과정에서 심사 담당자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등 입안지원과 법령심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

- 법제업무역량강화 사업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1년	국회 (‘20회계 연도 결산)	법제업무평가 제도의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 방안 모색 필요	법제업무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계획과 다른 법제업무컨설팅 실시 부적정 개선	연구용역 계획 수립 시 여러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충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⑥ 법제정비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4급 손문수, 044-200-6572, 6급 성예정, 044-200-6575)

(담당자: 4급 서장원, 044-200-6753, 6급 임현규, 044-200-6758)

(담당자: 5급 남수진, 044-200-6793, 6급 김민정, 044-200-6761)

(담당자: 5급 강창현, 044-200-6855, 6급 신호정, 044-200-6857)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 해당없음
사업내용	(법령정비)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과 기업 등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 · 국민 참여에 기반한 법령정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입법제도 운영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령-조례-규칙 간 위임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법령체계와의 조화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 · 자치법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문 체계 등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제공 ·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등을 종합적 검토·자문함으로써 참고 자치법규안의 상시적인 품질 관리 제고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 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령용어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실시 ·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각 부처의 정비를 지원 ·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는 법령안 및 조례안을 검토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정비사업 지출변동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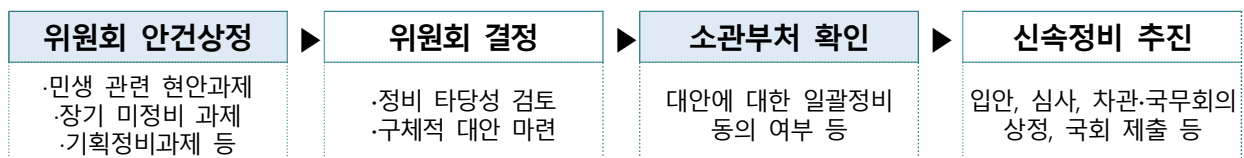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1,301	1,542 (18.5)	1,542 (-)	1,542 (-)	1,542 (-)	-	4.6
'22~'26요구 (증가율)	-	1,521	1,659 (9.1)	1,879 (13.3)	2,289 (21.8)	1,789 (△21.8)	4.1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위한 **법령정비위원회 설치·운영**(+155백만원)
- **법령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제안, 지자체 건의, 각 부처 요구사항, 지시사항 등 개별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 대안을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안건에 대해 소관부처를 대신해 **입안부터 공포까지 전 입법과정**을 추진

【신속정비 프로세스】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1,542	- 법령정비사업 392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12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1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7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32백만원 = 32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2회 × 15.6백만원=31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6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2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59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74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5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7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23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2~'26(요구)	1,521	- 법령정비사업 392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12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1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7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32백만원 = 32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2회 × 15.6백만원=31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6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2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59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53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4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5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23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3	'21~'25(당초)	1,542	- 법령정비사업 392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12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1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7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32백만원 = 32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2회 × 15.6백만원=31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6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2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59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74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5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7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23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2~'26(요구)	1,659	- 법령정비사업 560백만원 · 계약직 4명 × 36백만원=142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200회) 20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0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법령정비 위원회 관련 운영비 123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9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4회 × 21.5백만원=86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3회 × 15.3백만원=46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11백만원=11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2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59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03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4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5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18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4	'21~'25(당초)	1,542	－ 법령정비사업 392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12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1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7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32백만원 = 32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2회 × 15.6백만원=31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6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2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59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74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5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7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23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2~'26(요구)	1,879	－ 법령정비사업 560백만원 · 계약직 4명 × 36백만원=142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200회) 20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0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법령정비 위원회 관련 운영비 123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41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4회 × 21.5백만원=86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3회 × 17백만원=51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15백만원=15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8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28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67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903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4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5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180백만원 · 알법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용역비=20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5	'21~'25(당초)	1,542	－ 법령정비사업 392백만원 · 계약직 3명 × 37백만원=110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120회) 12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15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37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1회 × 32백만원 = 32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진회의 개최 2회 × 15.6백만원=31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6백만원=6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19회 × 0.3백만원=6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7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27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59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774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5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7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23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2~'26(요구)	2,289	－ 법령정비사업 560백만원 · 계약직 4명 × 36백만원=142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200회) 20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0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법령정비 위원회 관련 운영비 123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42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4회 × 22백만원=88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15백만원=15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8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7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1,303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4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5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180백만원 · 알법 통합 플랫폼 구축 일반용역비=60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26	'22~'26(요구)	1,789	– 법령정비사업 560백만원 · 계약직 4명 × 36백만원=142백만원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1회) 61백만원 · 법령정비 사례집 (2,800부) 21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등 관련 수당(200회) 20백만원 ·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입법 관련 회의 운영 20백만원 · 법령정비 과제 발굴 관련 회의 등 38회 ×1백만원= 38백만원 · 법령정비 위원회 관련 운영비 123백만원 · 연구용역 3건 × 45백만원=13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정비 426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집 발간 4회 × 22백만원=88백만원 ·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3회 × 18백만원=54백만원 ·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 개최 1회 × 15백만원=15백만원 · 자치법규 전문가 자문수당 24회 × 0.3백만원=7백만원 · 외국 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연구 8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정비지원 관련 연구용역 145백만원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인력 인건비 30백만원 ·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포상금 9백만원 · 기타(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70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803백만 · 알법 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6명×40백만원=240백만원 ·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94백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발간 8,500원×3,294부=28백만원 ·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일반용역비=153백만원 · 알기 쉬운 법제구축 연구용역비=180백만원 · 알법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비=10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참석 2명×4백만원=8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2,109	-	△20	2,089	1,933	-	176
'20	1,526	-	-	1,526	1,425		101
'21	1,383	-	±31	1,383	1,301	-	8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최근 3년으로 한정)

- 법령정비

외부기관	지적사항/조치사항
국회 (‘19년 예산)	(지적사항) 국민법제관 구성 다양화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국민법제관 구성 다양화 및 활동 성과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국회 (‘18년 결산)	(지적사항) 법제정비 사업 추진시, 외부 의견을 수렴한후 내부 검토를 거치는 방식의 경우 타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사항) 법령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부처 협의 지속 추진
국회 (‘19년 결산)	(지적사항) 국민법제관 활성화 및 구성의 다양성·참여 확보 필요 (조치사항) 국민법제관 위촉시 활동실적 저조자는 해촉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국민법제관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국민법제관 신규 위촉시 여성, 비수도권, 30대 이하 청년,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업가·전문가 등을 우선 위촉함.
국회 (‘20 국정감사)	(지적사항)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의 높은 불수용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조치사항) 불수용 과제의 유형을 분석하여 불수용 사유에 대한 대안을 마련, 부처 재협의 요청 실시 등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무담당관 회의 등 계기시 법제처 발굴과제에 대하여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협조 요청함.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외부기관	지적사항/조치사항
국회 (‘20년 결산)	(지적사항) 2020년 발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집’은 대국민 홍보 목적의 발간물이라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

외부기관	지적사항/조치사항
	치입법 역량 제고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 또한 권역별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는 당초 계획과 달리 법령해석국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로 추진하는 법령해석업무 담당자 연찬회와 함께 개최하여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조치사항) 향후 사례집 발간 및 회의 개최 시 자치법제 역량 제고라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관련 예산 집행 예정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외부기관	지적사항/조치사항
국회 (‘18년 결산)	(지적사항) 법제처는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제구축사업 추진 시 국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앞으로 국회예산편성권을 존중하여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며, 사업 추진 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19.10.)
국회 (‘19년 결산)	(지적사항) 법제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미미한 사업 효과가 나타난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지속여부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조치사항) 사업 내용 및 예산 조정(199백만원→123.6백만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국회 (‘20년 결산)	(지적사항) 법령용어정비위원회 위원 수당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기타 자문수당이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 (조치사항) ‘22년 예산명세서상 해당 내역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전반에 대한 수당으로 보완하여 편성 및 목적에 따른 집행 실시

⑦ 행정법제 혁신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6급 주경근, 044-200-6737)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21.3.23.)됨에 따라, 후속 법령 정비·분석에 관한 연구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법 체계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사업기간	'20년 ~ 계속
총사업비 ¹⁾	해당없음
사업규모 ²⁾	해당없음
지원조건 ³⁾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행정법제 혁신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277	470 (69.7)	470 (-)	470 (-)	470 (-)		14.1%
'22~'26요구 (증가율)		470	735 (56.4)	735 (-)	735 (-)	735 (-)	11.8%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470	○ 행정법제 혁신 사업 470백만원 -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79백만원 · 자료인쇄비등 4백만원x6회=24백만원 · 참석수당 0.2백만원x20인x6회=24백만원 · 검토수당 0.15백만원x20인x6회=18백만원 ·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6회=4.8백만원 · 숙기료 0.6백만원x6회=3.6백만원 · 운영경비 5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25백만원x6회=150백만원 ·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 12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30백만원x4건=120백만원 - 기타 필요경비 25백만원 · 일반수용비 3백만원 ·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 국내여비 8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22~'26(요구)	470	○ 행정법제 혁신 사업 470백만원 -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79백만원 · 자료인쇄비등 4백만원x6회=24백만원 · 참석수당 0.2백만원x20인x6회=24백만원 · 검토수당 0.15백만원x20인x6회=18백만원 ·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6회=4.8백만원 · 숙기료 0.6백만원x6회=3.6백만원 · 운영경비 5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25백만원x6회=150백만원 ·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 12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30백만원x4건=120백만원 - 기타 필요경비 25백만원 · 일반수용비 3백만원 ·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 국내여비 8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23	'21~'25(당초)	470	○ 행정법제 혁신 사업 470백만원 -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79백만원

			·자료인쇄비등 4백만원x6회=24백만원 ·참석수당 0.2백만원x20인x6회=24백만원 ·검토수당 0.15백만원x20인x6회=18백만원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6회=4.8백만원 ·속기료 0.6백만원x6회=3.6백만원 ·운영경비 5백만원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25백만원x6회=150백만원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 12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30백만원x4건=120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25백만원 ·일반수용비 3백만원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행정법제 혁신 사업 : 735백만원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107백만원 ·자료인쇄비등 2백만원x16회=32백만원 ·참석수당 0.2백만원x7인x12회+0.2백만원x11인x2회+0.2백만원x32인x2회=34백만원 ·검토수당 0.15백만원x7인x12회+0.15백만원x11인x2회+0.15백만원x32인x2회=26백만원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8회=6.4백만원 ·속기료 0.23백만원x16회=3.6백만원 ·운영경비 5백만원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이의신청 제도 처리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150백만원x1식=150백만원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 24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240백만원x1식=24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통계·분석 전문인력 : 40백만원 ·통계·분석 전문인력 임금 등 3.3백x12월x1인=40백만원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책자 발간 : 53백만원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인쇄 : 0.005백만원x10,000부 =50백만원 ·감수료 : 250,000원x10인=2.5백만원 -해외 행정법제 혁신 사례 실태조사 : 12백만원 ·항공료 및 체재비 4백x3인= 12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37백만원 ·일반수용비 3백만원 ·특근매식비 7백만원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업무추진비 9백만원

'24	'21~'25(당초)	470	○ 행정법제 혁신 사업 470백만원 -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79백만원 · 자료인쇄비등 4백만원x6회=24백만원 · 참석수당 0.2백만원x20인x6회=24백만원 · 검토수당 0.15백만원x20인x6회=18백만원 ·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6회=4.8백만원 · 속기료 0.6백만원x6회=3.6백만원 · 운영경비 5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25백만원x6회=150백만원 ·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 12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30백만원x4건=120백만원 - 기타 필요경비 25백만원 · 일반수용비 3백만원 ·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 국내여비 8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22~'26(요구)	735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735백만원 -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107백만원 · 자료인쇄비등 2백만원x16회=32백만원 · 참석수당 0.2백만원x7인x12회+0.2백만원x11인x2회+0.2백만원x32인x2회=34백만원 · 검토수당 0.15백만원x7인x12회+0.15백만원x11인x2회+0.15백만원x32인x2회=26백만원 ·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8회=6.4백만원 · 속기료 0.23백만원x16회=3.6백만원 · 운영경비 5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 이의신청 제도 처리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150백만원x1식=150백만원 ·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 24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240백만원x1식=24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통계·분석 전문인력 : 40백만원 · 통계·분석 전문인력 임금 등 3.3백x12월x1인=40백만원 -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책자 발간 : 53백만원 ·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인쇄 : 0.005백만원x10,000부 =50백만원 · 감수료 : 250,000원x10인=2.5백만원 - 해외 행정법제 혁신 사례 실태조사 : 12백만원 · 항공료 및 체재비 4백x3인= 12백만원 - 기타 필요경비 37백만원 · 일반수용비 3백만원 · 특근매식비 7백만원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업무추진비 9백만원
'25	'21~'25(당초)	470	○ 행정법제 혁신 사업 470백만원 -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79백만원 · 자료인쇄비등 4백만원x6회=24백만원 · 참석수당 0.2백만원x20인x6회=24백만원 · 검토수당 0.15백만원x20인x6회=18백만원 ·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6회=4.8백만원 · 속기료 0.6백만원x6회=3.6백만원 · 운영경비 5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 개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25백만원x6회=150백만원 ·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 12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30백만원x4건=120백만원 - 기타 필요경비 25백만원 · 일반수용비 3백만원 ·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 국내여비 8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22~'26(요구)	735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735백만원 -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107백만원 · 자료인쇄비등 2백만원x16회=32백만원 · 참석수당 0.2백만원x7인x12회+0.2백만원x11인x2회+0.2백만원x32인x2회=34백만원 · 검토수당 0.15백만원x7인x12회+0.15백만원x11인x2회+0.15백만원x32인x2회=26백만원 ·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8회=6.4백만원 · 속기료 0.23백만원x16회=3.6백만원 · 운영경비 5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 이의신청 제도 처리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150백만원x1식=150백만원 ·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 24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240백만원x1식=240백만원 - 입법영향분석 통계·분석 전문인력 : 40백만원 · 통계·분석 전문인력 임금 등 3.3백x12월x1인=40백만원 -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책자 발간 : 53백만원 ·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인쇄 : 0.005백만원x10,000부 =50백만원 · 감수료 : 250,000원x10인=2.5백만원 - 해외 행정법제 혁신 사례 실태조사 : 12백만원 · 항공료 및 체재비 4백x3인= 12백만원 - 기타 필요경비 37백만원

			·일반수용비 3백만원 ·특근매식비 7백만원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업무추진비 9백만원
'26	'22~'26(요구)	735	○ 행정법제 혁신 사업 : 735백만원 -행정기본법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 : 16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x4회=16백만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107백만원 ·자료인쇄비등 2백만원x16회=32백만원 ·참석수당 0.2백만원x7인x12회+0.2백만원x11인x2회+0.2백만원x32인x2회=34백만원 ·검토수당 0.15백만원x7인x12회+0.15백만원x11인x2회+0.15백만원x32인x2회=26백만원 ·교통비 0.04백만원x20인x8회=6.4백만원 ·속기료 0.23백만원x16회=3.6백만원 ·운영경비 5백만원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 230백만원 ·이의신청 제도 처리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150백만원x1식=150백만원 ·신규의제 발굴 연구 40백만원x2회=8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 24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240백만원x1식=240백만원 -입법영향분석 통계·분석 전문인력 : 40백만원 ·통계·분석 전문인력 임금 등 3.3백x12월x1인=40백만원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책자 발간 : 53백만원 ·알기 쉬운 행정기본법 인쇄 : 0.005백만원x10,000부 =50백만원 ·감수료 : 250,000원x10인=2.5백만원 -해외 행정법제 혁신 사례 실태조사 : 12백만원 ·항공료 및 체재비 4백x3인= 12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37백만원 ·일반수용비 3백만원 ·특근매식비 7백만원 ·임차료 2.5백만원x4회=10백만원 ·국내여비 8백만원 ·업무추진비 9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	-	-	-	-	-	-
'20	313	-	-	313	301	-	12
'21	300	-	-	-	277	-	2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19년	국회 (‘19 국정감사)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행정기본법의 과급력 등을 감안하여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는 등 법률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분과회의 포함)를 총 38회 개최하였고, 공청회를 권역별로 총 3회 개최하여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각 지역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를 토론자로 참여시키는 등 행정기본법 공론화 적극 추진
2021년	국회 (‘20 결산)	향후 연구용역 수요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용역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행정법제 혁신 연구용역 추진 전 연구용역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용역 결과물의 활용성 제고 추진
		법제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해당 내역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행정법제 혁신 연구용역은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의 연구용역비(260목)로 추진하여 편성 내역에 맞게 집행 추진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 지자체 매칭 신규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 : 해당없음

⑧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재량지출)

(담당자: 5급 하선우, 044-200-6784, 8급 윤성운 044-200-6791)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다양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입법지원센터(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입법예고 등 지원) 및 법령안편집기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참여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 - 법제처 홈페이지 및 내부포털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반영하고,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 활동 및 내부 정보 자원 보호
사업기간	'01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6,878	8,801 (28.0)	8,801 (-)	8,801 (-)	8,801 (-)		6.4
'22~'26요구 (증가율)		8,801	10,563 (20.0)	10,153 (△3.9)	9,398 (△7.4)	9,189 (△2.2)	1.1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8,80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385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2,322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71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45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96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 구입 5.86백만원 × 32core - 개인정보등록 차단 소프트웨어 6.831백만원 × 2식 - 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168백만원 × 28식 - 한글 웹기안기 소프트웨어 3.528백만원 × 8식 - AP이관 6.38백만원 × 7명 × 7개월 - 유지·보수 1,336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18백만원 - 유지·보수 318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4백만원 - 유지·보수 84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53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697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464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45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3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48백만원 - 상용임금 27.6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5.3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2~'26(요구)	8,80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385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2,322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71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45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96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 구입 5.86백만원 × 32core - 개인정보등록 차단 소프트웨어 6.831백만원 × 2식 - 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168백만원 × 28식 - 한글 웹기안기 소프트웨어 3.528백만원 × 8식 - AP이관 6.38백만원 × 7명 × 7개월 - 유지·보수 1,336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18백만원 - 유지·보수 318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4백만원 - 유지·보수 84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53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697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464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45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3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48백만원 - 상용임금 27.6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5.3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3	'21~'25(당초)	8,80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385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2,322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71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45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96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 구입 5.86백만원 × 32core - 개인정보등록 차단 소프트웨어 6.831백만원 × 2식 - 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168백만원 × 28식 - 한글 웹기안기 소프트웨어 3.528백만원 × 8식 - AP이관 6.38백만원 × 7명 × 7개월 - 유지·보수 1,336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18백만원 - 유지·보수 318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4백만원 - 유지·보수 84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53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697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464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45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3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48백만원 - 상용임금 27.6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5.3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2~'26(요구)	10,563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7,218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3,712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764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504백만원 × 1건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라이선스 7.7백만원 × 8core -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5.363백만원 × 32식 ○ 정부입법지원 1,640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 구입 7.816백만원 × 8core - 개인정보등록 차단 소프트웨어 6.821백만원 × 6식 - 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5백만원 × 20식 -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5.335백만원 × 16식 - 검색엔진 라이선스 22백만원 × 2식 - 유지·보수 1,337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565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29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336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93백만원 - 유지·보수 93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50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697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461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45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5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52백만원 - 상용임금 28.5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5.6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4	'21~'25(당초)	8,80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385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2,322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71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45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96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 구입 5.86백만원 × 32core - 개인정보등록 차단 소프트웨어 6.831백만원 × 2식 - 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168백만원 × 28식 - 한글 웹기안기 소프트웨어 3.528백만원 × 8식 - AP이관 6.38백만원 × 7명 × 7개월 - 유지·보수 1,336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18백만원 - 유지·보수 318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4백만원 - 유지·보수 84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53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697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464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45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3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48백만원 - 상용임금 27.6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5.3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2~'26(요구)	10,153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853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2,419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817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612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537백만원 - 유지·보수 1,537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532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1,096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36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0백만원 - 유지·보수 100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61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8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470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322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10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55백만원 - 상용임금 29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6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5	'21~'25(당초)	8,801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5,385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2,322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713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345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1,968백만원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솔루션 구입 5.86백만원 × 32core - 개인정보등록 차단 소프트웨어 6.831백만원 × 2식 - 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168백만원 × 28식 - 한글 웹기안기 소프트웨어 3.528백만원 × 8식 - AP이관 6.38백만원 × 7명 × 7개월 - 유지·보수 1,336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318백만원 - 유지·보수 318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4백만원 - 유지·보수 84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553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697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464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45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3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48백만원 - 상용임금 27.6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5.3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2~'26(요구)	9,398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4,021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370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872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774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2,527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92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600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137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687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5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0백만원 - 유지·보수 100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1,108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515백만원 × 1건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4.9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500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248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10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1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30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57백만원 - 상용임금 29.5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6.4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26	'21~'25(요구)	9,189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4,957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377백만원 × 1건 - 정보시스템 개발 722백만원 × 1건 -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구축 위탁 1,928백만원 × 1건 - 민간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5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925백만원 × 1건 ○ 정부입법지원 2,192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542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650 백만원 × 1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772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시스템 구축 322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450백만원 × 1건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200백만원 - 정보시스템 개발 100백만원 × 1건 - 유지·보수 100백만원 × 1건 ○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645백만원 - 바이러스 백신 등 사용료 5백만원 × 19건 - 유지·보수 550백만원 × 1건 ○ 사무용 PC 등 구입 및 유지보수 163백만원 - 사무용 PC 구입 1.1백만원 × 50개 - 사무용 프린터 구입 400천원 × 30개 - 사무용 노트북 구입 1.5백만원 × 5개 - 사무용 SW 구입 150천원 × 500건 - 유지·보수 88백만원 × 1건 ○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60백만원 - 상용임금 30백만원 × 3명 - 복리후생비 0.4백만원 × 3건 - 고용부담금 6.8백만원 × 3명 - 기술평가 및 자문수당 2.2백만원 × 7건 - 홍보물 제작 12백만원 × 1건 - 레이저프린터 토너 0.4백만원 × 180개 - 정보화관련 서적 25천원 × 4건 - 실명확인 서비스 4.789백만원 × 1건 - 정보보안 교육 강사비 0.3백만원 × 4건 - 특근매식비 12백만원 × 1건 - 국내여비 5백만원 × 1건 - 사업추진비 26백만원 × 1건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6,248	-	111 (예비비)	6,359	6,136	-	223
'20	9,026	-	-	9,026	8,824	-	202
'21	7,051	-	-	7,051	6,878	-	173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0년	국회 (‘19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윈도우7 보안기술 지원 종료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예비비 사용 신청 시점(11월)에 불용액의 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었는바 예비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치사항)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할 경우 불용액 발생 여부 및 활용 등 기정예산으로의 충당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비비를 신청하겠음

- 평가결과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2019. 3.)]‘우수’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2020. 3.)]‘우수’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2021. 3.)]‘우수’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간단히 요약)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매칭 신규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

- 해당사항 없음

⑨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재량지출)

(담당자: 5급 성연일, 044-200-6768, 6급 장진욱, 044-200-6772)

(담당자: 5급 홍민재, 044-200-6556, 6급 김경주, 044-200-6556)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 체계적 법제전문교육 실시 -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인 법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법제업무의 품질을 제고 -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 · 학습활동을 지원,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학계 등 전문가 사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 교류 및 해외 선진법제를 체험함으로써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도모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 법제교육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 법제실무인력전문성향상
사업기간	'0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지출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1,172	1,221 (4.2)	1,221 (0)	1,221 (0)	1,221 (0)		1.0
'22~'26요구 (증가율)		1,221	2,627 (115.2)	2,926 (11.4)	3,046 (4.1)	3,106 (2.0)	26.3

○ 법제교육

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자화하는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구축[+253백만원]

－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법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이지만, 법제처는 다른 전문교육훈련기관과 달리 별도의 교육운영시스템 없이 온나라 전자문서를 통해 방대한 교육과정 운영업무를 처리 중으로 이에 따른 비효율적 행정처리 방식 개선이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제교육 안내, 법제교육신청·취소, 교육 수료 이후 만족도 조사 및 수료증 출력 기능, 자료실 등을 구현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고 교육생이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집합교육 현장강의 동영상 등 교육 자료를 게재하여 교육 전·후에 자율 학습을 도모하고,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법제교육 효과를 극대화

－ 법제처는 같은 규모의 다른 전문교육훈련기관에 비해 교육실적이 월등하나, 조직 규모가 크지 않아 교육운영시스템 마련을 통해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법제교육원 개원('23. 8. 준공,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위치)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물적 기반 마련 필요함.

* 최근 교육실적: ('12) 4,992명 → ('16) 19,607명 → ('21) 36,327명('12년 대비 7.3배 ↑)

【 타 전문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비교 】

구분	법제처 법제교육과	조달교육원	청렴연수원
정원	9명	15명	24명
교육계획인원 (19년 기준)	23,190명	9,720명	16,181명
교육운영시스템 구축여부	X	O	O

② 법제교육원이 입주할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이 2023년 8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 사무실 이전 및 집기 취득을 위한 예산반영 필요 [+422백만원]

- 서울 양재동 법제교육센터 시설의 노후화 및 교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교육센터를 확충한 법제교육원 건립
- `23. 8. 법제교육원 건물이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 사무실 이전 등 교육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교육원 개원은 `24. 1.로 계획 중임.

【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개발 현황 】

구분	내용		
대지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57-4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47,928.00㎡	건축면적	3,581.09㎡
연면적	12,438.84㎡	지상층면적	10,502.16㎡
건폐율	7.48%	용적률	21.91%
층수	지하1층, 지상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차개요	총 50대(지상 45대(장애인 3대), 지하 5대(장애인 1대))		
조경면적	27,063.30㎡ (56.12%)		



-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시설 중 법제처 우선 사용 공간에 대한 시설 배선 작업,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
- 입주기관 자체공사 부분(청사 건립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행)인 칸막이 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설비 추가·보강 공사,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기기 전열 설비 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기·통신 및 소방 공사 등 전반적인 내부공사 실시
- 기존 양재동 법제교육센터 내 사용 중인 파티션, 책상, 테이블, PC, 기타 사무기기 등의 집기 철거, 태안군으로의 이송 및 법제교육원 내 재배치 및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리 작업 등 실시
- 전산강의실 및 분임실 등에 설치될 PC, 책상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반영

【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주요 시설 】

우선 사용 공간*				공동 사용 공간**			
구분	면적 (㎡)	개수 (실)	수용 인원(명)	구분	면적 (㎡)	개수 (실)	수용 인원(명)
분임실	30	4	48명 (12*4)	대강당	468	1	300명
소강의실	70	2	72명 (36*2)	소강의실	106	1	50명
중강의실 (전산강의실)	166	1	80명		77	1	40명
대강의실	248	1	150명	중강의실	133	2	130명 (65*2)
사무실	188	1	20명	강사대기실	33	2	
				외부회의	62	2	

* 우선 사용 공간: 연간 법제교육 계획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된 공간

** 공동 사용 공간: 연간계획 없이 수시로 사용하는 부처가 사용하는 공간

【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법제교육원 우선 사용 공간 활용 구상도 】



- ③ 법제교육원 개원('24) 대비 장기교육과정 시범사업 실시[+79백만원]
- 법제교육원 관련 일정(법제교육원 준공: '23. 8., 교육운영 시작: '24. 1.)에 맞춰 중·단기 위주의 교육과정을 장기교육과정으로 개편 필요
 - 현재 협소한 교육 공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도 불구하고 단기과정(1일~3일 교육과정) 위주의 제한된 교육 서비스 제공 중으로 신설 교육원 입주 시 확충된 강의장·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최대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별·지자체별 수요에 맞는 신규 강의과정 편성·운영 필요
 - 장기교육과정 시범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니즈를 파악하여 장기교육과정 과목구성 등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장기교육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장기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른 교육운영상 혼란 최소화
- ④ 대국민 법제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시 등을 위한 교육콘텐츠 확대 개발 [+652백만원]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22. 1. 13.)에 따른 지방의회 신규직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 수요 발생
 - 지방의회에서 조례 입안·심사를 담당하는 신규인력 및 조례에 관심 있는 주민에 대해 조례 제·개정 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입안실무 등의 교육 지원
 - 지방의회 직원 및 주민 대상 자치분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교육콘텐츠 개발
 - 다문화 가족 대상 법제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대 실시
 - 국적취득, 출산·보육, 교육, 혼인·이혼 등 관심 분야의 법령과 사례 위주의 법제교육 콘텐츠 개발
 -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생활 속 알기 쉬운 법령'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사회통합 증진 및 국민행복에 기여
 -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원격교육이 불가피하여 콘텐츠의 질적·양적 확충이 필요하므로,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습 효과도 높이기 위하여, 친구 및 가족들과 함께 접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개발 추진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1,221	○ 법제교육 : 1,043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2~'26(요구)	1,221		○ 법제교육 : 1,043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3	'21~'25(당초)	1,221	○ 법제교육 : 1,043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 법제교육 : 2,449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666백만원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장기교육시범사업 실시 6회 × 13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842백만원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5회 × 30백만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다중접속 온라인 게임 개발 592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구축: 253백만원 - 법제교육원 시설이전 및 집기취득: 422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22~'26(요구) 2,627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4	'21~'25(당초)	1,221	○ 법제교육 : 1,043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2~'26(요구)	2,926	○ 법제교육 : 2,748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법제교육원 운영 1,705백만원 · 교육생 수송 셔틀버스 운영 0.35백만원 × 2대 × 114일 · 법제교육원 시설이용료 20,000명 × 0.06백만원 · 법제교육원 관사보증금 20명 × 20백만원 ·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5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5	'21~'25(당초)	1,221	○ 법제교육 : 1,043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 법제교육 : 2,868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법제교육원 운영 1,825백만원 · 교육생 수송 셔틀버스 운영 0.35백만원 × 2대 × 114일 · 법제교육원 시설이용료 22,000명 × 0.06백만원 · 법제교육원 관사보증금 20명 × 20백만원 ·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5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22~’26(요구)

3,046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26	'22~'26(요구)	3,106	○ 법제교육 : 2,928백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587백만원 · 법제교육 과정 221회 × 2.66백만원 - 법제교육 동영상 제작 2백만원 · 동영상 제작 2회 × 1백만원 - 법제교육 기본교재 고도화 용역 10백만원 · 표준강의안 시각화 개선 용역 2회 × 5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비 190백만원 · 교재 및 과정 등 교육콘텐츠 개발 3회 × 3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2회 × 50백만원 -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43백만원 · 해외연수경비 2회 × 21.5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 관리 143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경비·청소 용역비 3명 × 2.6백만원 × 12개월 · 법제교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 · 법제교육센터 시설 운용 공공요금 12개월 × 3.7백만원 - 법제교육 지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68백만원 · 무기계약직 급여 및 고용부담금 등 2명 × 12개월 × 2.8백만원 - 법제교육원 운영 1,885백만원 · 교육생 수송 셔틀버스 운영 0.35백만원 × 2대 × 114일 · 법제교육원 시설이용료 23,000명 × 0.06백만원 · 법제교육원 관사보증금 20명 × 20백만원 ·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5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82백만원 - 전직원 워크숍 24백만원 - 지식인서재 도서구입 5백만원 - 민간위탁교육 41백만원 - 처내 직원교육 12백만원 · 전문가초청강연회 11회 × 0.5백만원 · 법역량강화과정 12회 × 0.4백만원 · 정부시책교육 5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96백만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61백만원 - 연구회 운영 19백만원 · 통합연구보고서 발간 5백만원 · 자료구입비 12회 × 10인 × 0.03백만원 · 전문가참석수당 10회 × 0.3백만원 · 법제실무연구회 개최 7백만원 - 법제선진화를 위한 현장방문 16백만원 · 현장방문 3회 × 5.3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1,023	-	-	1,023	1,016	-	7
'20	1,310	-	-	1,137	945	-	192
'21	1,394	-	-	1,394	1,172	-	22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도	외부기관	지적사항	조치사항
2020년	국회 (‘19회계연도 결산)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내실화 필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방문국 및 참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수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도록 노력하고, 준비 단계부터 연수단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인터뷰·면담 역할 분담 등 연수단 개개인의 참여도를 제고하여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사이버교육 실적개선 및 수요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차질 없이 법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확대 개발·제공 할 필요가 있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추진하고, 법제처에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법제처 나라배움터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 접근성을 보완하며 집합교육· 순회교육 시 법제처 나라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수료인원이 증가되도록 노력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TheCapitol.Net 법제교육)** 미국 연방의회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군인, 외교요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워크숍, 연방 입법·
개정안 작성 과정 등 법제교육 과정 운영
- **(프랑스 법제교육)** 국립행정학교(ENA)의 초급 고위공무원 법제교육
및 공무원재교육(입법학), 국립지방공무원센터(CNFPT)의 현직 공무원
대상 정책결정 및 입법기술 단기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 (독일 법제교육) 범형식성 실무안내서 발간·교육, 고급직·상급직 공무원 대상 통합적 법학교육 모델 구축·운영
- (영국 법제교육) 런던대학교 William Dale 경 법제연구센터 법제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력직 법제담당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⑩ 외국법제기관교류(재량지출)

(담당자: 5급 정준수 044-200-6827, 7급 강민정 044-200-6824)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 외국법제기관 교류 · 기관장급 및 실무자급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국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법제행정 발전을 도모 ·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법제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수요국의 법제발전을 지원 · MoU체결국과의 고위급 정례협의체 운영 및 회의 개최를 통해 법제분야 상호 이해증진 및 법제교류협력 추진동력 확보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아시아 각 국의 법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교류기반을 구축하고, 아시아 각 국의 법제 개선사항 및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협력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개최, 한-인니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운영하여 양국 간 법제분야 상호 이해 증진 및 법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기간	'0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외국법제기관교류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¹⁾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238	277	277	277	277	-	-
(증가율)	-	(16.4)	-	-	-	-	3.9
'22~'26요구	-	277	307	315	325	332	-
(증가율)	-	-	(10.8)	(2.6)	(3.2)	(2.2)	4.6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277	- 외국법제기관교류(1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0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02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5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31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9백만원
	'22~'26(요구)	277	- 외국법제기관교류(1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0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02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5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31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9백만원
'23	'21~'25(당초)	277	- 외국법제기관교류(1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0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02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5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31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9백만원
	'22~'26(요구)	307	- 외국법제기관교류(15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번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고위급 정례협의체 운영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5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52백만원

'24	'21~'25(당초)	277	- 외국법제기관교류(1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0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02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5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31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9백만원
	'22~'26(요구)	315	- 외국법제기관교류(163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8백만원 · 통번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5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고위급 정례협의체 운영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5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52백만원
'25	'21~'25(당초)	277	- 외국법제기관교류(125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5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5백만원 · 통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0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02백만원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50백만원) · 법제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 31백만원 · 한-인니 국장급 정례협의체 관련 경비 19백만원
	'22~'26(요구)	325	- 외국법제기관교류(173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8백만원 · 통번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25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고위급 정례협의체 운영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5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52백만원
'26	'22~'26(요구)	332	- 외국법제기관교류(180백만원) · 국외출장여비(3회) 60백만원 · 외국법제기관 초청 경비 10백만원 · 통번역비, 국외출장 지원경비 등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고위급 정례협의체 운영 30백만원 -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152백만원) · 회의 개최 경비(1회) 152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9~'21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140	-	-	140	137	-	3
'20	394	-	△29(추경)	365	298	-	67
'21	317	-	-	365	238	-	79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18 회계연도 결산심사)	○ 당초 동 사업을 통해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 '중국 판공실 교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인도네시아 법제교류',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을 실시 - 또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및 외국법제기관 교류' 명목으로 국외여비가 당초 630만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동 사업에 1,910만원을 집행 ○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국회 ('20 회계연도 결산심사)	○ 국가 간 협력과 교류는 상호 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하여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지급하는 비용이 없음 ○ '23년부터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을 외교부 ODA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변경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매칭 신규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 : 해당사항 없음

⑪ 법제정책연구개발(R&D) 사업(재량지출)

(담당자: 5급 이선미, 044-200-6547, 6급 정혜진, 044-200-6548)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국정과제	해당없음
사업내용	법령심사·법령해석 및 법제지원업무 등 처 내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수행
사업기간	'9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법제처

□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법제정책연구개발(R&D) 사업 지출변동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결산	'22예산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21~'25계획 (증가율)	68 -	74 (121)	74 -	74 -	74 -	- -	- 2.1
'22~'26요구 (증가율)	- -	74 -	120 (62.2)	120 (-)	120 (-)	120 (-)	- 12.8

○ 세부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내부·외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행과제 수를 종전 2개에서 3개로 1개를 추가하고, 단가를 현실화하여 반영함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2*	'21~'25(당초)	74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7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7백만원 = 74백만원
	'22~'26(요구)	74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7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7백만원 = 74백만원
'23	'21~'25(당초)	74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7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7백만원 = 74백만원
	'22~'26(요구)	120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40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40백만원 = 120백만원
'24	'21~'25(당초)	74	○ 정책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37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2개 * 37백만원 = 74백만원
	'22~'26(요구)	120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40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40백만원 = 120백만원
'25	'21~'25(당초)	74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40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40백만원 = 120백만원
	'22~'26(요구)	120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40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40백만원 = 120백만원
'26	'22~'26(요구)	120	○ 정책연구용역 3개 과제 수행(평균 단가 : 40백만원) - 연구용역 과제 3개 * 40백만원 = 120백만원

□ 고려사항

- 최근 3년간('18~'20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9	67	-	-	67	61	-	6
'20	67	-	-	67	66	-	1
'21	70	-	-	70	68	-	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 ('20 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사항) 법제연구용역 수요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 필요 (조치사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들에게 개별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내역을 안내함으로써, 이를 고려하여 과제가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